

제41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
 - 종합정책질의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5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5
 - 부별심사: 경제부처

(0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상정을 하고 나서.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종합정책질의

○위원장 박정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김영환 위원 예, 자료 요구 잠깐.....

○위원장 박정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제가 이미 금융성 채무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제출인데요, 방금 오기형 위원님 질의 중에 부총리께서 22년 세법 개정안 이후에 세수감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22년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기재부 스스로가 세수 감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께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기재부, 자료제출하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세수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세수감이 크지 않았다, 아주 미미했다, 23년도 세수결손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정 예, 참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박 2일을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식민지에서 또 분단에서 또 공산국가들의 침략전쟁에서 일어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어서 지금 OECD DAC에 포함되고 해외원조가 웬만한 국가 예산 항목보다 더 큰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결산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그 결산 내역을 상세히 다루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ODA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리님과 외교부장관님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와 유상원조를 다 총괄 조정하지요, 총리님? 제가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외교부장관님, 우리 ODA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올해 결산 때?

○외교부장관 조태열 2조를 넘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굉장한 규모입니다. 웬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예산이 2조 7000억인데, 이것 한 3조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 예산보다 더 많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가 더 확대되고 있지요?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좀 보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에 하던 식으로 분쟁 국가라든가 또 어려운 나라에 다리를 지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ODA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2027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AI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AI, 클라우드, 4대 신기술 인력이 대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

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최형두 위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핵심기술 인력만 2027년까지 6만 명 정도가, 특히 우리가 AI 기본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AI를 제대로 할 국내 인력이 없습니다. 전부 미국 갑니다. 중국도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 정부가 험프리 부통령이 방문한 뒤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걸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네소타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농학, 공학, 의학 그리고 행정대학원, 수의과, 간호대, 보건대학원하고 서울대 교수, 당시 석박사 과정으로 서울대 교수 218명을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미네소타에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총리님과 외교부장관님께, 지난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ODA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필요한데,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불러서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결국 우리나라에 돌려보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 같은 곳에서 최우수 공대 졸업생들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서……

예컨대 경상남도에는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울산에는 UNIST, 대구에는 DGIST 다 있는데 경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칭 카이스트 아세안공학기술원, 카이스트와 아세안공학기술원을 같이 경남에 설립해서 경남의 최고의 제조기업들의 연구인력을 여기서 육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의 최우수 공대 졸업생들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ODA 자금으로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외교부장관님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른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개도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ODA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형두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 우리 총리님이랑 과기부장관님, 우리 국가과학기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 조달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또 ODA를 더욱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실제로 최우수 인력을 국내 대학에 유치해서 또 대학원에 유치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직접 ODA를 달리가 아니라 원화 베이스로 집중하고 국내에 연구인력을 더 정주시킴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R&D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ODA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덕수** 우리의 ODA 방향을, 도로를 지어 주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은 해외로 나가서 하지만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다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대한민국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또 실제로 아마 코스트와 이즈(costwise), 팬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최형두 위원 경상남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상세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ODA 질적 향상,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출신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야당의 김병주 위원께서 KF-21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미납금 사안과 관련된 질의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방부차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김병주 위원이 아까 한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미납금 발생 관련해서 1조 원을 손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윤 대통령께서 뭘 했나?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그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1조 원의 변화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을 저희 정부하고 해당되는 기업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충족해 나갈 건가는 추후 논의될 내용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1조 6000억 원의 분담금 중에 지금 6000억 원은 분담을 하는 걸로 하고 1조 원을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조 원이 손해가 아니고 분담금을 갚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은 약속돼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시제기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그 1조 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 계획들을 아마 체크를 해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1조 원의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된 게 언제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자세한 건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80%인 8000억 원을 미납을 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아까 야당 위원의 이야기는 1조 원을 윤석열 정부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사실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사

실입니까? 답변을 차장이 한번 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2년 7월 달 그리고 23년 9월 달, 2차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 협의를 충실히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또 실무 차원의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실무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가 고위급에서 있었습다.

○임종득 위원 고위급 실무 협의는 박근혜정부 이후 7년 만에 처음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없다고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조 원은 손해는 아니지만 결국은 예상했던 1조 원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갈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실제 1조 원이지만 그동안에 개발비 절감 등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건 우리 국내 기업과 정부 재정 당국과 분담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상당히 큰 사업이고 지금 우리 방산이 붐을 타고 있잖아요. K-방산이 붐을 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인니하과의 관계 속에서 KF-21 사업이 좀 빠격거린다라고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국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도 찾아가서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이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국익 차원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인니하과의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조치를 해서 KF-21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균 출신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어제 예결위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종단간 암호화를 이용하면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메시지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서비스하는 SNS 메신저는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비밀대화 기능, 라인의 레터 실링, 텔레그램, 왓츠앱 등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가 정보보안을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유독 텔레그램만 마약과 불법 영상물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종단간 암호화를 사용하는 카카오톡 비밀대화 기능이나 왓츠앱 등 다른 메신저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마약이나 불법 영상물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다른 메신저들은 저희들이 수사를 할 때 비교적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유독 텔레그램만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다른 메신저들을 사용하면 자신들이 결국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텔레그램은 자신들의 범죄 정보를 어떤 국가기관에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이들의 믿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텔레그램에 범죄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11년간 0건이라는 통계자료도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검찰이 텔레그램 CEO를 체포해 약식기소를 한 핵심 사유가 범죄자 정보 요청을 텔레그램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범죄혐의는 아동 성범죄와 마약 밀매 방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우리 사법 당국도 텔레그램 측에 범죄자 정보 요청을 했거나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현재 3건을 했는데 아직 회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에서 이렇게 마약 거래나 불법 영상물 유포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내의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받아서 하거나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 사법공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텔레그램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김용태 위원** 10월 딥페이크 불법 영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김용태 위원** 저는 텔레그램이 제출을 거부하는 범죄정보 확보 방안이 정부의 종합대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렇게 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희소식은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시다라는 이번 텔레그램에서 하여간 앞으로는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통심의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 하면서 그동안 요구했었던 25건의 동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과 함께 협조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텔레그램에서의 범죄로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입하게 될 부다페스트협약이라 불리는 사이버범죄협약이나 방금 말씀하신 방심위가 참여하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텔레그램 범죄정보 확보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올해 7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뻐했고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2009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호기 수주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말고 실제로 원전 수주를 한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한덕수** 상세한 것은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집트하고 몇 군데에서 아주 완전한 스케일의 원전은 아니었지만 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수주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계약자로 저희가 수주를 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에 시공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주요 부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한 바는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만약에 대한민국이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프랑스 EDF 같은 곳에다가 입찰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자국 내 건설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신규 원전 건설이 몇 개국에서나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몇 년부터 말씀……

○**권향엽 위원** 2009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2009년 이후예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권향엽 위원** 27개국에서 계약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13개국은 사업 지연 또는 착공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에 폴란드에서 한 곳 이루어졌고 2023년에는 불가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서는 지난 7월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도 적게는 1000조 원 많게는 2000조 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1000조 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COP28에서 22개 원전 메이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원전 설비를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게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는 많은 신흥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총합해져서 일부 언론이나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것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어떻게 적고 많고의 차이가 1000조 원이나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은 장관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원전 수주가 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46조 원 규모입니다. 원자력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권 위원님, 그게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앞으로 나오는 전 세계 원전을 다 수주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커지는 원전 시장에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보여 드렸듯이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등을 제외하고 지난 15년 동안 중복된 국가까지 포함하면 27개국 정도만이 원자력 건설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외에는 실적이 없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1000조 원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억측 아닌가요?

2017년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우선협상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우선협상권이 상실된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워낙 낮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향엽 위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강점이 가격, 품질, 납기라고 했고 또한 장관께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기한 내 시공 능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단가도 21년 세계 원자력 회보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프랑스의 45% 수준입니다.

건설 단가도 낮고 기한 내 시공 능력도 우수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원전은 대한민국이 다 수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들의 이런 질문에 최종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차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법무부에서 국적과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법, 일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국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 오늘 이 자리부터는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님, 외교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제처장님께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저 문구를 잘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읽다가 중단된 그다음 문서인데요.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인 1986년 7월 우리 정부가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 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해 공포한 문서입니다.

읽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나 다만 그 행위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온 것.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체, 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저 문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잘 들으셨지요?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저 문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규근 위원 공부 안 해도 저 문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도 이의 없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이후에 정부가 변경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내용입니다.

○차규근 위원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혹시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별한……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인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저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타당합니다.

○차규근 위원 마지막으로 김문수 고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정부위원들께서 저 내용에 대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저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 제국과……

○차규근 위원 동의를 못 하신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제국과 민국은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차규근 위원 장관님, 저 내용에 다른 국무위원들 다 동의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그런데 저는 동의를 못 하…… 제국과 민국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국은 군주국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차규근 위원 참 말문이 막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걸 동일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차규근 위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김문수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왜 말문이…… 제국과 민국을 구분 못 합니까?

○차규근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정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질의를 시작한 어제는 심훈 선생의 서거 88주기였습니다. 심훈 선생께서 쓰신 ‘그날이 오면’의 몇 구절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 그 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듯하거든 /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 커 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 그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오이다'

심훈 선생께서 김문수 장관의 저 발언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서울 도봉구를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시 기재부장관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채 발행 없이 잘 대처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적자성 채무가 사십 몇조 늘어났고 그 내용이 일반회계로 전용했던 건 약 54조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승인 없이도 사실상 국채 발행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왜 추경 하지 않았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기재부차관께서 추경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지난 기재위 회의에서.

그래서 저희가 쪽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2009년 이후에 바뀌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면 최근 20년 동안에 세수 오차 관련해서 여섯 번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네 번을 추경을 했어요. 이게 정권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그 당시에 제1차관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추경은 그러면 요건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한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 답변할 때 제가 사실은 기재위에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2차관이 그때……

○오기형 위원 같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와서……

○오기형 위원 아,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제가 그때 세입경정을 하면서 추경을 했다는 건 세입경정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등 세출 쪽에 추경을 해야 될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세입경정을 같이 한 겁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기금 돌려막기 추경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 이야기는 그 변명이 한이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국회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또 내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십 몇조 권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권한이 1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5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50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100조까지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기준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면 될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결단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다 독식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여러 가지 형식논리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기형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시간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기재부에서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여섯 가지의 위법성에 대해서 예정처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법령 위반에 따라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계를 누구를 해야 될지 그 명단을 가지고 같이 국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결특위에서 징계를 결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무조건 승인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런 것이냐, 저희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고 오해를 갖고 있다면 설득해야지요. 자료를 제공하면서 더 설득하셔야지요. 올해, 작년에 그 설득과 대화가 없었고 지금 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입장이 다릅니다’.

국가재정법은 그 유권해석의 권한이 기재부에 있으니까 기재부가 다 알아서 유권해석하면 그게 다 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다르고 그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 속에 설득이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 같이 여야 위원님들이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세수결손의 저희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다만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한 것은 기재부가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서 받은 저희의 책무를 저희는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기형 위원 책무인지 아닌지를 더 토론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국가재정법상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저희가 권한을 행사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원님께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다음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주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수·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해양산업의 집적화, 융·복합화라는 당초 클러스터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보고받으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광양 갔을 때 현장에서 소통 같이 했고요. 문제 분석해보니까 지금 스마트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거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국산화 장비로 전환시키는 테스트베드로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기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핵심품목에 대한 게 너무 한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항만, 물류, R&D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연구소 등등 해 가지고 전남도 그다음에 광양시 같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 플러스 그다음에 이 품목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까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에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24년 6월 기준으로 추가 입주는 1건으로 여전히 저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발전계획들 잘 짜 가지고 진행 상황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 자리에는 기재부장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묻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568억 원의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재정 여건도 좋아지고 정부 선투자금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신의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 사건입니다.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의 777사령부 산하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년 병장, 제대를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갑질을 했다라는 이유로 휴가 반납 5일 처분을 받고 근신 처리, 즉 격리조치가 되어서 부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17일간. 그런데 점호를 받지도 않고 의문사로 발견이 됐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돌연사, 미상의 돌연사가 부검 결과였습니다. 아무런 병력이 없었고 자살 징후도 없었습니다. 점호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군대 내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성폭력사범이나 이런 돌연사, 변사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이첩을 하도록 원래 군 재판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했는데 군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평균 78일이면 민간 이첩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일이 넘는 동안 아무런 진상규명과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쉬쉬하고 묵혀 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지역구의 아버님입니다, 부모님이.

국방부차관님, 장관님이 안 나오신 것 참 아쉬운데요. 이 사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난번 국방위에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변사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이첩도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군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 이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관련 내용 진행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총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주철현·장철민·이용선·윤준병·이준석·임미애·황정아·김영환·박지혜·김태선·문금주·김영진·오기형·허종식·이재강·한민수·서영석·김병주·차규근·홍기원·허영·권향엽·안도걸·위성곤·임호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김용태·김영환·권향엽·허성무·조승환·최은석·임종득·안도걸·오기형·임호선·차규근·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김성원·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위해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과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님과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연일 자정을 넘겨 가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기간 내내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재정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날카롭게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박정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경제 분야 재정사업들에 대한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별심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5일 목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출신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 뵈니까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우리 군장병들의 일일 급식비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23년도 기준으로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한 끼에 4330원 정도 됩니다.

군인들은 신체 활동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열량 급식 지원이 꼭 필요한데 현재의 기본 급식단가가 고등학교 급식비, 민간업체 단체 급식비에 많이 못 미칩니다. 고등학교 급식비는 한 끼에 4911원, 민간 단체 급식비는 한 끼에 7504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급식단가가 동결되었는데 식자재 단가는 연평균 5.4% 상승해서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022년, 23년 자체가 대폭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과,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군장병의 사기 양양을 위한 급식비 단가 부분에 대해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장병의 의식주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기존의 동일 품목 의무형 급식체계에서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종득 위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과거의 의무형 급식체계는 사단급에서 메뉴를 결정하면 장병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들을 그냥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좋아하는 것과 불호하는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서 많은 잔반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반을 최소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형 급식체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대대급 부대에서 장병의 선호조사를

해 가지고 메뉴를 결정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하면 그 요구한 식자재들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에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약 10만~11만t 정도 이렇게 보였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195억 원, 약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선택형 급식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군에서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개 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평균 한 24.2%의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나타났고요, 많은 곳에서는 30%까지 배출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병들의 급식의 질이 높아져서 쓰레기 배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음식에 관련되는 부분인 만큼 부총리님께서 국방부와 잘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장병들의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지원을 하는 정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단가 부분도 저희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과거와 달리 아주 대폭 인상을 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병력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부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남북9축 고속도로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백두대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영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까지 309.5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설사업은 1999년 국토종합계획에 처음 반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 정책과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9축 고속도로는 전체 연장이 438km인데 그중에 150km 정도는 기존의 고속도로를 공용하거나 지금 사업 중에 있고요.

문제는 백두대간을 지나는 약 300여km가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부가 매 5년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 26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보면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보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임종득 위원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도권 집중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예타가 도시 지역은 잘 되는데, 왜냐하면 B/C를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잘 아실 겁니다. 최초에 계획될 당시에는 강남 구역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 논밭이었습니다. 잠실은 뽕밭이었지요. 개통 초기에 수요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역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늘의 변화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건설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지요. 아마 그때 당시에 예타를 했다 그러면 시작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경부고속도로는 건설이 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 무분별한 개발 그다음에 국가 예산 낭비 이런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예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타 제도가 여전히 지역 간의 빈부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TK 신공항 특별법 등 SOC 관련 특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저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움직임일 텐데 왜 이런 특별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일단은 예타 제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SOC의 경제성, 그러니까 예타 제도 자체가, 그 제도 자체의 존립 이유 자체가 일단 경제성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비경제적인 요인들을 반영해 오면서 저희가 제도를 보완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남은 내용은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수현 위원님께서서는 예결위원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3일 차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빠지지는 않았고 인사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주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을 앞으로 더욱더 존경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공주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21대에 부여군과 청양군이 통합선거구로 조정이 되면서 두 번의 낙선을 하고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개인 사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낙선된 그 8년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는 참으로 국민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간 중에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국민의 옆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위치에도 있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누구보다 잘 경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감이자 또 책임감으로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국민 곁에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무위원들께서 별것 아닌 제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국민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수고하십니까.

며칠 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우리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일부지만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의 인식도 비슷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여당의 국회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장관께서 이 의료대란 문제,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장관께서 직접 보고를 하셨거나—심각하기 때문에—아니면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예측을 하지만 아마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아예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대통령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에 응급의료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중증 환자에게 양보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대책의 전부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발언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장관께서 직접 정말로 제대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에게 오늘은 제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조사에 의하면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미와 문화 관람을 하면서 친구를 사귄 수도 있고요, 청소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훈련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예상 수요자를 1만 1000명으로 두고 19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누적 신청자가 8월 말 기준 약 1만 3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수치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현 위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만 해도 약 2000명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의 신규 신청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 공고에서도 이용자의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신규 신청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니까 23년까지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의 충분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현 위원 물론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하면서 기재부의 기준에 따르면 아마 그러한 기준들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발달장애인을 가져 본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제가 그 가족 중의 하나입니다만—이 한 명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에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기재부의 일반적 논리에 대해서 복지부는 좀 더 간절하게 이 문제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재정 당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활동 지원하고 또 주간활동 지원 간에 중복할 경우에는 차감하는 것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도 물론 100% 그거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수현 위원 2025년도 예산안에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2222억 원 이렇게 배정을 했던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24년 8월까지 신청자가 1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이 1만 2000명도 ‘그래, 그 정도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한 명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께서, 복지부가 정말 그 가족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현 위원 그리고 부총리께도, 그러한 기재부의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원칙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들여다봐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장관께서는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박수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올해 5월 9일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예산은 2024년 올해 약 722억 원인데 이 중에서도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2022년 11월 29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시행을 예고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 지원 사업이 사업 선정자는 있는데 그 수행할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업 수행할 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지부가 이 문제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 예산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저희도 왜 안 되는지를 알아보니깐, 일단 발달장애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돌봄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박수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리고 또 종사자 처우가 매년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확보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별도로 전문 수당도 인상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상해보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300개 이상의 제공기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여쭙보면서 저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니깐 함께 챙겨 나갑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그나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최대 3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으로 화면을 좀 보시면, 설명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도 역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감안해서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수당 인상 등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유의미한 그런 대안을 꼭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1분 남았지만 경제부총리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공주·부여·청양은 3년 연속, 특히 부여는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었어요. 다른 것 다 빼고 그중에 가장 많은 건의와 요구를 받는 것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개선 사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2023년에서 2032년까지,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32만ha의 상습침수 농경지 중에서 17만 5000ha가 배수개선 사업을 했는데 현재 14만 6000ha가 남은 것이지요. 여의도 면적의 500배 정도가 아직 상습침수구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후재난이라 불릴 만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절실한데 2032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과 4만 9500ha만 추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부총리님, 이렇게 찢끔찢끔해서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기후위기 정도가 아니라 기후재난에 대비한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25년도 예산 자체도 한 7%……

○박수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정말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부가 됐든 빨리 서둘러야 한다면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장 박정 박수현 위원님, 약자를 위한 예산 그리고 지역예산까지 꼼꼼히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시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 하루도 잠을 편안하게 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국회가 늘 이렇게 정쟁의 연속인 것 같아서 사실 얼굴 들고 다니기가 정말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세대들에게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리고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결산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또 친일파가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독도를 지우니 마니 끊임없이 이렇게 정쟁으로, 또 친일 프레임만 남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고…… 그런데 결산에서 제대로 질의를 하고 제대로 따져서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첨단산업이라든지, 저도 저희 지역 현안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틀간의 예결위장에서도 그랬고 또 방금 전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특히 반헌법 인사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 전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최상목 부총리님 부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조지연 위원 연설에서도 언급된, 김문수 장관님, 이 전문 부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 헌법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 국무위원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식민지배가 정당한 정도가,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이미 돼 있고요. 식민지배의 그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상 유례 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김문수 장관께서 제가 환노위원으로서 청문회장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시다만 서슬이 퍼릴 때 노동운동하시고 민주화운동하신 분이 일제시대로 만약에 이분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는 항일운동하셨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친일에……」 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시간이니깐 조금만 들어 봐 주십시오.

저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반헌법, 반국가적 인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런 해묵은 철 지난 친일 프레임 이런 것 논의하라고 이 민의의 국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생 논의하고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지, 우리 민생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경제 질의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저는 첨단산업 육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 전략자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자리라든지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 단위의, 몇십조 단위의, 몇백조 단위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첨단전략산업기금법 이런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도 냈었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런 방안과 어떤 기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키우기 위한 투자 계획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저희는 산업 전쟁에 나가 있는 심정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첨단전략산업기금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하고 저희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만 26조 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한 바가 있고 공급망기금도 5조 원 규모로 이미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도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조치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해 주신 그런 법안의 취지 잘 유념해서 향후에도 계속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원전산업도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생태계, 산업생태계가 무너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저는 정말 아프게 다가온 것은 부품업체들, 하부의 어떤 중소기업, 정말 영세한 이런 사업들조차 줄폐업했다라는 것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다시 기조 전환을 함으로써 또 세일즈 외교 와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것 한 몇 가지 꼽 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코 원전 수출을 한 것이고요.

○**조지연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일각에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성과를 과장했다 또 워낙 저가로 수주해서 빛 좋은 개살 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가 수주 부분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 한창 수주전이 가 열이 됐을 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의 사업 단가가 워낙 경쟁 국가에 비해서 낮은 부 분이 있는데 그것을 묘사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주를 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체코 현지 언론뿐만이 아 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단가가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나라가 신한울 3·4호기를 할 때 사업비가 약 12조 정도가 되고 2009년에 저희가 수주했던 바라카 원전 4기의 총사업비가 2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 수주한 체코 2기의 예상 사업비가 24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가다, 덤핑 수주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우리 에너지 정 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친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 과 역량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건 서면으로 질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시갑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갑의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잠을 설칩니다. 정부가 해결책이 없이 늪으로 빠 저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희망의 단초를 마련하기 를 바라면서 장관께 응급실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 이러 게 했는데 어제 복지부가 ‘9월 4일 날 15명 군의관 그리고 9월 9일 날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 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응급실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의료인력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가 2023년에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21일 기준으로 513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40% 정도가 감소한 건데 이 얘기는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문만 열려 있을 뿐이고 실제로 충분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방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가 결국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등 응급실 제한 운영을 밝혔거나 또 평일야간·주말 진료가 중단된 곳이,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한 곳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에서 27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까지도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의사 수도 보면 저기에 전공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숫자를 보면 되려 작년 말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탁의, 일반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 위주로의 응급진료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 생각은 응급의료체계에 이상이 없다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통해 가지고 중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재이송 비율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재이송된 것이 40.9%고 22년에 33.6%가, 2년 만에 한 6% 정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앰블런스에서 죽고 또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늦게라도 복지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전공의 이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응급실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매일 객관적인 통계를 4종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병상, 인력 그다음에 환자 수, 배후진료 현황까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의료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공의 이탈만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일 브리핑을 문제인 정부 때 코로나 극복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일 브리핑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19를 극복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브리핑을 보면 마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부가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에 보면 말을 안 들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마치 깡패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거기는 별표로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명절 때마다는 각 지자체 주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올 설 명절보다는 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영석 위원 같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계획한 일일 브리핑을 언제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감추거나 그게 아니라 솔직히 그 현황을 알려 드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감추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동안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수백 명 정도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화면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보냈는데 8월 31일 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현재까지 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은 했는데 결국은 그동안도 이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보의를 언제까지 파견할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것은 당분간 비상진료가 지속되는 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요청은 이때까지는 병원 단위로 하다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응급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전공의와 군의관들이 응급과 관련된 전문의거나 전공의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일단 응급 전문의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응급 전문의와 같이 협업을 해서……

○서영석 위원 현장에서 공보의나 전공의가 얼마나 응급의료에 도움이 될까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진료의 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진료의 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보의, 군의관도 동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의로 나가 계신 분들도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적절하게 치료를 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어 가고 있고 또 치료가 늦어져 가지고 중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의료 사태에 대한 어떤 사례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최초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시간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어느 병원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핀셋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정부가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년의 통계도 보면 추석 연휴 때 한 배 정도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응급의료의 현실로 보면 거의 그냥 묵숨만 붙어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이 공문을 보낸 것 보면 실제로 공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부가 사고를 쳤는데 지자체하고 국민이 책임져라,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공문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공문 보낸다고 해서 저희 책임이 없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하여튼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고 응급의료 행태는 추석 이후가 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인데 이게 시중에 나오는 얘기처럼 ‘김윤한조이’라고 하는 의료대란의 오적으로 이름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긴장감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시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실 건가요?

○서일준 위원 예.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계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차관 나왔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 3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총 3년간 보면 한 740억 정도 피해가 났는데요 지원은 보험금까지 해 봐야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이 어민들 양식업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생계 구호를 위해서는 5000만 원 한도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또 충분한 보상은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해보험금,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해보험금 가입을 더욱 독려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원액도 보니까 한 어가당 5000만 원밖에, 한도가 5000만 원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서일준 위원 그것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분야하고 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부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난 8월 달에 차관님이 한번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현황이 어떻던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금년 현재는 9월 3일 기준, 어업인 피해 신고 기준으로 어류가 한 3957만 마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명게는 사실상 95%가 다 폐사됐습니다. 내년엔 우리 국민들 명게 맛을 못 볼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대책을 해수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고수온이 계속 될 건데 해수부 대책은 뭘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도 현장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온이 계속 지속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수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양식품종 개발 연구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식장 재배치도 검토토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이라든지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등 기존 정책도 더욱 확대하고 또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일준 위원 단기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아닙니다. 중장기 대책이 단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후쿠시마 피담 때문에 작년 한 해 우리 어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실제 금년에는 고수온 때문에 현장 어민들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피해 지원금을 좀 늘리고요. 중장기적보다도 대책을 빨리,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서일준 위원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서일준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지난 8월에 강진-완도 고속도로가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금년 1월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저 현황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중점추진 고속도로고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일반추진 고속도로인데 이게 문제인 정부 말기에 2차 고속도로 계획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근거가 뭐니까? 장관님, 왜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중점추진이고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일반추진 고속도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글썄, 저 앞에 ‘중점’이 붙은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같은 해에 같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중점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뭐니까? 장관님, 중점은 뭐고 일반은 뭐니까? 중점은 먼저 추진하고 일반은 중점 다 추진하고 나서 일반 하는 거지요? 국토부 실무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구를 보면요—금년 7월 기준입니다—강진·완도는 7만 8000명, 통영·거제는 35만 2000명입니다. 약 5배 많습니다. 연장도 비슷합니다. 총사업비도 비슷합니다. 건설 시의 추정 교통량은 강진-완도는 6283대, 통영-거제는 3만 5000대입니다. 그런데 강진-완도는 중점추진 고속도로가 돼서 예타가 이미 끝났고 통영-거제는 아직도 예타가 진행 중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고속도로 게이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 같고요.

○서일준 위원 제가 강진-완도를 편취하는 게 아닙니다. 강진-완도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진-완도하고 통영-거제가 비슷하게 나간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강진-완도는 중점으로 묶어 두고, 통영-거제는 일반 추진을 한다는 이게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고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서일준 위원 통영-거제는 저기 수도권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고속도로 재원을 배분할 때 각 대권역별로 배분을……

○서일준 위원 대권역은 그러면 경남은 다른 권역이 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여튼 지금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사실은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서일준 위원 알겠어요.

기재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지만, 기재부장관님 지금 예타 진행 중이니까요 조속하게 예타 마무리하고 강진-완도나 마찬가지로 조속히 양 지역에 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지금 우리 조선산업 중에 최고 효자 상품이 LNG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LNG선이 전 세계에 한 700대 정도, 700척 정도 운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0척 이상을 대한민국 조선 3사가 건조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단가가 적당 한 3500억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화물창 원천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이걸 프랑스 GTT라는 회사에 원천기술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5% 지급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수주액의 5%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3500억의 5%, 약 170억가량을 지금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불했냐 하면 한 5조 원 지불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선 3사가 한 1조 원 정도 지불하고요. 앞으로 지금 건조 예정 중인 게 한 250척 되는데 수조 원이 로열티로 나갈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형 화물창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일준 위원 한번 실패하면 안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 자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업계들 간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조속하게 대안 마련해서 꼭 국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이 국산화가 중요한 게요 지금 조선 경기는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노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좀 힘들어도 봉급을 많이 주면 올 수 있는데 로열티 이런 것 지불하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이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꿉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선 경기는 좋지만 지역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아
우성입니다. 그래서 빨리 로열티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아껴서 정말 우리 내국인 근
로자들이 조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조선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 꼭 이것 의지를 가지고 국산화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명심하고 기술 자립화하고 그 관련 생태계 키울 수 있도
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영진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부총리님께서 국가부채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 폭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세계 다른 기관에서 권고 사안이 있었다라고 총리
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권고 사안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채 비율 관련해서 그 정도면 우리 경제 규모나 펀더멘털로 수용 가능
하다고 봤는데 부총리와 총리께서는 과다하다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세계 다른 기관에서
부채에 관련한 위험신호를 보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질의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です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상 국토교통부 불용액이 최근 5년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어제 예결위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세수 부족의 영향이,
저희 국토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3년에 4.5조 원 대규모 불용이 나타났고 불용률
도 12.3%로 최대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용액 중 대부분은 특별회계·기금 전
출금 불용이 많았던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교통회계로 전출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불용인데 결론은 전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말로 그냥 불용 처리했던 것 아닙니
까? 불용의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지적하신 대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
입이 줄어서 불용을 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또 착공이 어렵다든지 또 사업 적정성 재검
토로 인해서 적기 착공이 어렵다든지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
을 골라서 예산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실제로 불용된 사업들은 SOC 사업의 규모가
크고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한 10년간의 SOC 사업을 진행하는 과
정을 보면 그런 문제보다는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사
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다시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연속인데, 사실은 작년에
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불용은 실제로 이후 각 SOC 사업의 해당 사업별 사업비 예산을

증가시킬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내부거래, 그러니까 회계 간 거래를 포함하면 4.5억 원이고요 실제로 집행 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4000억 정도가 교특회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공 지연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불용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선 동일한 효과입니다. 4.5조 불용이 전국에 있는 모든 SOC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사업비 총액의 증가로 결론은 국민 세금의,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조 세수결손에 따르는 불용 48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효과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결론은 이후에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재부장관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영향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OC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많지요. 전국에 수많은 SOC, 철도 도로 항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업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으면서 오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큼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1조 원의 사업을 10년간 한다 하면 그 10년으로 나눠 버리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지요.

그러면 각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기간을 줄이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좀 줄이고 교통편익을 강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전국적인 SOC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경험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담당하는 현장에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총리님께서도, 재정 당국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로 가짓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한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모든 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번 개선을……

○김영진 위원 부총리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토부장관께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원희룡 장관 시기에 국회에서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22년에 불용이 됐고 23년에 다시 2억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2013년 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대구는 진행이 됐고…… 대구, 광주, 수원 아주 도심지 한가운데에 있는 군 비행장 이전을 통해서 구도심의 위험을 해소하고 또 이전하는 곳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을 했는데 두 번 연속 불용 우려가 있어요.

장관님,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그것은 선행하는 것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요,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가는 김에 민간공항도 같이 만들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민간공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지역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장관께서 결정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저는 장관께서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예산들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이 사안을 2회 연속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집행을 하든지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국회의 뜻을 헤아려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재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까지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각 정부 부처의 필요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요, 2022년까지? 받고 공개했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공개했다는 뜻이……

○**김영진 위원** 필요예산 요구액을 각 부처에 신청을 받고,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그 개요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2022년부터 그 제도를 중단했어요.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 내용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부처별로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었고 안 한 적도 있었고,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 보도자료예요. 그렇지요? 2022년까지 해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각 부처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 원을 요구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게 마지막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됐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중단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2년 이전에도 어떤 연도

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액을 공개를 하다가 어떤 연도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안 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에는 보도자료 전체를 보면, 전체 부처와 각급 정부기관의 예산 요구사항을 국회나 아니면 사전에 보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각 부처나 각 정부기관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예산들이 어떻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가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요만이라도 올해 요구했던 자료들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시점이 9월 3일이라서 바로 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저희가 5월 말에 예산 요구를 받고 보도자료를 냈던 것은 그냥 부처별 예산 요구액뿐이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아요. 부처별로 해서 개요에 대해서 쪽, 주요한 부분들의 총액과 개요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산 요구 총액하고 개요요?

○**김영진 위원** 개요, 내용.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정상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됐던 자료들과 공개됐던 자료를 기재부가 굳이 비공개하면서 시민단체나 각 단체에서 소송까지 가서 공개하는 그런 바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 있는 부분은 예산 요구 상세 내역과 관련된 공개였고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중간에 공개됐을 경우에 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 요구 내역 그 자료 자체를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22년 이전에 보고됐던 형식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기 평택시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시갑의 홍기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총리께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는데 총리께서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셨습니다. 혹시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장관님께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의료개혁,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고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사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불만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사과를 하셨다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 텐데 너무도 당당한 자세로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에 사실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애꿎게 생명을 잃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는 병원 치료받는 데 고통받는 국민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의료 현장 체감과 대통령실 메시지가 괴리되어 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다’, ‘의대 증원 반대세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저희 응급의료만 한정해서 보면…… 저희가 매일 객관적인 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어떤 판단이 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복지부는 그 지표에만 매달리지 않고……

○**홍기원 위원** 아니, 의대 증원 반대세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상당 부분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원 위원** 저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초래돼서 죄송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진이 없어서 응급실 열한 곳을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28개월 아이, 열사병으로 19개 병원을 돌다 사망한 60대 환자, 27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분만한 임신부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사실 응급실 뽕뽕이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실 텐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뽕뽕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이게 환자가 돌아가

셨을 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치료가 응급실 공백 때문에 늦어진 건지는 쉽게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현실에 그런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총리께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이 의료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혹시 정부에서는 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7개 조건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했고요. 또 특히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2025년도야 다음 주면 수시 입학 모집이 되니까 힘들고요. 2026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 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전공의들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 정책의 진정성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선진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드리고 복귀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현재 정부의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정원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정부에 대화 촉구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관님 말씀은 전공의들이 앞으로 영원히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정부가 내놓을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어쨌거나 전공의들이 현 상태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 이 결과가 이렇게 끝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의료개혁을 안 했으면 이러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대한 타격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걸로 끝난다면 결국은 그 책임의 최종적인 것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기원 위원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받는 그런 체감, 느낌과 정부에서 반응하는 게 또 특히 대통령이 보여 주는 반응이 너무도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더 분발하겠습니다.

○흥기원 위원 다음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여기 있습니다.

○흥기원 위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흥기원 위원 특히 8월 한 달간 코로나 치료제 구하느라고 많은 환자들이 병원, 약국 돌아다니고 또 불편을 겪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칠팔월 여름 유행의 규모가 그 전 오뉴월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까지 치료제 사용량을 예측했었는데요. 실제 치료제 사용량이 한 40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예비비 확보를 통해서 치료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 공급이 됐고 지금은 현장에서 안정화가 된 상황입니다.

○흥기원 위원 올해 확보한 치료제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도 안 됐는데 그게 결국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완전히 잘못 예측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씀입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올 상반기 중에 건보 등재가 될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고……

○흥기원 위원 그런 예측도 잘못됐던 것이고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아니,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건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위기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흥기원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좀 이따 PPT가 뜰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 등재 협조 요청, 협조 통보에 저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여 있기도 하지만 ‘건보 적용 일자 는 지연될 수 있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저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가 늦어져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당시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질환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관리하는 그 과정에, 지금 엔데믹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소 그 예측이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약사회랑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살피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보 등재가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 등재 시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저희도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의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일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국무위원·정무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부산 서구동구 출신 광규택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시간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중구-동구-남구-영도구에 걸쳐 있고 전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구역을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의미도 있으며 항만과 배후 원도심을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부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광규택 위원**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엑스포 예정지였던 북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광규택 위원** 북항 재개발 사업 2단계는 2022년 예타 결과 B/C가 0.88에 불과하고 수익성지수(PI)도 1.0에 미치지 못해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2단계 사업 공모에 참여한 LH,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업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컨소시엄 대표사인 부산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업성 확보 기준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관님,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와 코레일은 2단계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후속 절차 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적기 추진을 위해서 산하기관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산엑스포가 거론되기 전에도 사실은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경영진의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기업도 신규 투자를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예타가 모자라서…… 수익성 개선, 사업성 개선이 된다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위원 2단계 사업 구역에는 해수부의 항만 구역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부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해당 부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철도부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공공시설 철도부지를 내부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부산 지역의 경제발전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해당 부지가 부산진역을 거쳐서 부산역으로 진입하는 현재 경부선의 본선 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철로 기능을 이전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철도의 기능을 유지, 철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귀속을 할 수 있는……

○곽규택 위원 장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철도로 쓰는 부지 말고도 철도부지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본선 부지가 거의 유일한 부지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 이익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북항 1단계 사업은 27년에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 산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사실은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한 800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량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곽규택 위원 상당한 수익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이익이 국고로 환수될 것이 아니고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필수 인프라인 트램이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지원해서 항만 재개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항후 부산항 북항 2·3단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귀속되는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서 처분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취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BPA 등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사업이익 재투자 외에도 지금 트램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 해수부와 부산시가 조금 이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곽규택 위원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필수 인프라로 도로를 건설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트램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도시철도법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되 합리적인 사업비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해양수산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철도법을 준용할 경우에 상당 시간 지체가 돼서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시고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 방안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들 같이 독려해서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HMM 본사 유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현재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 여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바람에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HMM 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또 본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북항에 사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직접 보고는 못 받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HMM 본사가 부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좀 해수부가, 해양진흥공사 최대 주주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곽규택 위원** 해양진흥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사옥 이전은 지금 본점 소재지라는, HMM 정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HMM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HMM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항 재개발을 위한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1단계 사업이 정해진 연도에 따라서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아울러 2·3단계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조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조속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2·3단계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컨소시엄 기관의 용역비 분담 거부로 인해서 지금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우선 부산항만공사가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고 추후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재개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협의 중재안 만들어서 이 용역안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곽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허성무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지난 이틀간 종합질의에서 부총리께서는 세수결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세수 오차가 많이 난 것은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세수 추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세수 추계 오류는 있지만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 느낌을 이틀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부총리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998년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수 추계 오류가 -13.1%입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나서 2023년, 그것보다도 더 많은 -14.1%의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온 나라를 그냥 멍들게 만들고 온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던 IMF 때보다도 세수 추계의 오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면 정말로 이게 과연 잘못된 게 없는가.

결과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송구스럽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이런 태도

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10조 내지 20조라 하셨는데 사실은 30조 정도로 지금 추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게 건힐 것으로. 역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그 유능하다는 기재부 관료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 전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렸던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어느 하나 이유 설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세수결손이 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저희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성무 위원** 최선을 다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고 재추계를 할 때 결손이 이렇게 크게 생길 줄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올해라도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지금 30조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처음 추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오차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정말 얼마쯤 오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다음 달…… 저희가 이번 달에 재추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의 세수 추계 오류는 전 세목에 따라서, 특히 법인세하고 양도세 그다음에 소득세 전 세목에 거의 다 저희가 생각보다 세수결손이 생겼고요.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법인세는 올해 경기하고 상관없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의 세수결손하고 똑같은 원인인데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가 잘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의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 상황이 안 좋은 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논리로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또 오늘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팩트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 국가경제를 잘 운영하고 경기를 잘 살려 내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정부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부 책임이 크지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전반을 통괄하고 계시는 기획재정부장관님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청와대의 경제수석을 하고 국가 경제정책 전체를 입안하고 리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제가 어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말씀드리는데 그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대응은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고 잘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썩 잘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수없이 지적이 됐지만 의회가 패싱됐다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일관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권리가 침해됐고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좋은 자치단체하고 재정 상황이 나쁜 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번의 미교부로 인해서 더 불균형이 생기는 거지요. 그야말로 균형발전에 역주행이 생겼다, 역주행을 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지방을 파탄으로 몰아간 수준의 어마어마한 행정행위였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지방이 어렵겠습니까.

자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계속 며칠간 나왔으니까 그다음 것 하나 띄워 주세요.

광역자치단체 것이 왼쪽이고요 옆의 것이 기초인데 기초 중에 맨 마지막이 경남 창원 시입니다. 제가 4년간 시장을 했던 도시인데요. 22년에는 8794억 원의 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491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지요. 17.4%가 줄었습니다. 1303억 원입니다.

저 정도 되면 지방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월급에 고정비용 나가는 것, 복지 예산 대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만 되는 것이지 상당한 사업들이 하던 도중에 멈추게 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가 길을 가고 있으면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도 구청에도 시청에도 찾아가면 모두가 안 된다는 소리다. 돈이 없다는 소리다’. 얼마 전에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시장님, 시장님이 시장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안 줘서 돈이 없을 겁니다, 힘

들 겁니다'.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교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제 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 점심 밥값이 줄었어'. 수많은 보조단체들이 있고 보조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20%가 깎였다, 30%가 깎였다, 살 수가 없다'. 그것이 중앙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이든 기획재정부장관님이든……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소속 아닙니까? 지방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이리 고통받고 살게 합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의 교부세가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어떤든 간에 조정이 돼야 될 상황이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큰 틀로 봐 가지고 저희가 23년도에 조정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남는 것은 25년도에 정산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세심함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하고는 달리 지방이 무슨 세금을 올려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빚을 지면 그걸 갚아 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큰돈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지방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기존에 어려웠던 지방에 교부금들이 미교부되면 불교부단체로 있거나 또 교부금의 비중이 낮은 수도권의 잘사는 도시들하고는 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더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현장의 절망을 부총리님께서 간절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장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님.

○허성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만약에 올해 또 이렇게 세수가 핑크가 나면, 이번에 4/4분기에도 또 그러면 교부세 미교부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재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부하지 않은 것 정산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교부 안 한 게 정산할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2차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래 작년에 11조 원을 교부세를 감을 해야 되는데요 8조만 감액을 했고, 사실 정산이라고 그러는 게 내년도 예산에 3조 원을 더 교부세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1조를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8조 원 했고 내년에 완전 정산 개념에서 3조 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23년도에 만약에 안 줄었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11조 원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빼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차관님, 지방의 어려움, 균형발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발언시간을 오래하셨는데 오늘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시청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답답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가능하면 꼭 발언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정** 자료 요청이요.

말씀하십시오.

○**허영 위원** 지난달 8월 29일 비공개 자리였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기재부2차관과 예산실장 등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약속한 사업들의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24차례로 총 240개의 정책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개발·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이것을 기재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대국민 약속은 무슨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그 예산은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거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이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별 약속한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 계

획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축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예.

기재부장관님, 허영 간사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지역을 도시면서 지역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요청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우리 국회와 같이 해야 되고, 특히나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허영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총예산과 연차별 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정적이지 않은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혹시 기재부와 상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공약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늘 안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일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부총리께 국가재정법 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과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따른 것’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외 사례들 리스트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혹시 감사원장님, 회계감사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 질의 내용이어서 잘 모르실 텐데 감사원에서도 전체 결산감사하실 때 예산에 반영돼야 됴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인 인정을 하는 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원에서 파악된 내용은 있는지, 이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경제부총리께서,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챙기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오늘 질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오늘 경제 분야 질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 의사진행발언인데 시간을……

○위원장 박정 신청을 하고 하셨어야 했는데……

○윤준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정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건가요?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박정 알겠습니다.

시간 다시 넣으십시오.

○윤준병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윤준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 1억 2000을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준병 위원 부총리께 여쭙보겠는데요.

예비타당성 또 사전타당성조사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이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게 원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아시겠습니까만 기본계획이 202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간이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검토를 하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필요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지 사업을 중단시켜 가면서 재검토 용역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예비타당성이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중단된, 그런 처분을 한 배경이 뭘까요? 국토부장관님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새만금 지역에 많은 SOC 사업이 동시다발……

○윤준병 위원 아니,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동시다발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시기가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것들은 개별 프로젝트들만 보니까요.

○윤준병 위원 그것을 굳이 중단시켜 가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그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됐지만……

○**윤준병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윤준병 위원** 개선과제가 나왔는데 SOC 3개 사업과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했더니 결과는 어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항 부문에 9건 그리고 철도 부문에 5건, 연결도로 부문에 5건의 개선과제가 창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 6월부터는 이런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되는 소요를……

○**윤준병 위원** 이 처분과 관련해서—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제가 느낀 소회는 정부가 챔버리 사태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국제적인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전북 예산 삭감 폭거를 한 게 아닌가…… 이 예산 폭거로 인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 저항이 크자 그것을 정부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발휘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멸절한 사업을 사업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8개월 중단을 시켰습니다. 국가적으로 8개월 지연·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단순히 중단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로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윤준병 위원**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중단됐으니까 그만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준병 위원** 지연이 된 거지요.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북 전체에서 새만금을 봤을 때 수요를 다시 예측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 했는데, 용역 결과 보니까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8개월 중단됐는데…… 진행하면서 유기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그것을 그렇게 적정성 검토 해서 일부 보완 과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적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은 오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또 그 당시에 국토부장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했어요. 국토부가 8개월 중단된 것에 대한 보상 방안은 뭘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개선과제를 도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윤준병 위원 그게 보상 방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예산 반영하고……

○윤준병 위원 그게 보상 방안이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8개월 중단된 것에 대한 보상 방안이 뭐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해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 외에 뭐 추가적으로……

○윤준병 위원 정해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8개월 중단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으로 결과가……

○윤준병 위원 8개월 중단시킨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으로 결과가 정상적이라는 것이지……

○윤준병 위원 보상 방안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보상 방안이라는 것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을 제시해야지요, 약속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요? 보상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가 7월 18일 날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이 첨단 미래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소관 농생명용지 조성비 및 농업용수 공급사업, 환경부 소관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 내년도 기재부 심의 단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출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약속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주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내용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용수 관련된 부분은 새만금 매립지 내의 산업단지와의 관계 때문에 조금 검토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잖아요. 그 선행 단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저희들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의 일환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저출생과 관련된

국정 정책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보강해 내는 그런 노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처에, 출생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처에 뒷받침돼야 될 내용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판단이 돼야 정부가 한 사람이 출생했을 때 나오는 편익에 해당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이든 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든 나름대로 규모가 설정될 수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 봐도 그렇고 인구특위에서 질문해 봐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부총리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자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분석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그래서 저출생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가장 근처에는, 우리가 출생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생이 실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고…… 개인 가구에서 부담하는 내용, 정부에서도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야만이 정부의 재정부담 내역 추산도 가능하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맞는 말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추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윤준병 위원** 물론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감사원장께서도 혹시 그것 관련된 내용, 감사원 차원에서 혹시 저출생과 관련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의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저출생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예.

○**감사원장 최재해**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내용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출생아 일인당 사회적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꼭 돈으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그에 따른 예산 투입도

적정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시가평균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균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수결손은 추계에 잘못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고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과 추계가 예측을 빗나간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적자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 화면에 보시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97년도, 98년도 IMF 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2022년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다시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관리재정수지가 5%대에서 2.6%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와 2024년에 다시 3.9%로 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일단 수지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고 수입의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출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했지만 수입, 그러니까 세수결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웠던 올해 경제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지요? 왜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세 차례의 경제위기 때처럼 3%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022년하고 2023년 상황은 글로벌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 만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리가, 미국의 금리나 주요국의 물가 수준이 30년에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에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 22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물론 그대로 절댓값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만같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의 성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부총리 말씀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상황 등이 더 자주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위기 시, 복원 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경 전문위원이 쓴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라는 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평상

시 강력한 흑자재정 및 균형재정 준수, 위기 시 예외 규정 활용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 수행, 복원 시 원래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이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께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상시, 위기 시, 복원 시에 맞는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 이어서 세대 간에 공정한 재정준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환경이 변화하고 불안해지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이 미래세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 최근 유럽에서의 친미래세대 재정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보면 한국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세대 테스트, 뉴질랜드의 웰빙 프레임워크 그리고 스위스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웨일스의 미래세대 복지법 등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용인할 수 있는 최고한도치인 70~75%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다시 급작스럽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의 예상 증대분 삼사십 %를 고려해서 평상시 국가부채 비율 목표를 25% 정도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재정의 혜택을 우리의 자녀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서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소중한 국가유산들을 매각하고 노후복지가 불투명해지고 소득재분배를 할 여력이 소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정의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이러한 공정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목표에 따른 유연한 재정 준칙을 준수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재정 여유분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산업 인프라, 기술개발 등에 투자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기본적으로 그 정신, 그러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정신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정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준칙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어떤 재정의 지출과 그러기 위해서 재원의 부분, 그러면 재정의 지출이 미래세대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은 그러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저도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정하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정준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 소나무 재선충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산림청장 임상섭 2014년도에 218만 본, 제일 많이 발생했다가 현재는 100만 그루에서 190만 그루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나무 재선충은 다른 병해충에 비해서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선충 방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만약에 산림청의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면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자체에 따라서 피해가 짧은 시간 내에 급증하게 되면 국비 지원한 것 외에도 지자체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와 다르게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면 지방재정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의 매년 국비와 지방비의 7 대 3 매칭 비율이 이 소나무 방제와 관련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방제 예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님께서도 앞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에게 많은 설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어제 저는 과거의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출산·저출생 관련 경제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차규근 위원 전 세계에서 1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놀랍게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0.7이고요 저희가 0.72입니다.

OECD가 올해 내놓은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1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1983년 이후 40년간 줄곧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40년째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스페인, 1.19와도 격차가 매우 큼니다.

지난해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발생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부총리님께서도 이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저출산 예산은 없고 다만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중에 가족(family)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예산을 비교하면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줄곧 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GDP 1.4%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여전히 OECD 평균 2.1%에 비해서는 크게 낮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달하는 프랑스 2.7%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1.26명인 일본의 1.7%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부총리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해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올해 정부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24년에는 16조 원, 25년에는 19.7조 원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저출생 상황에 비해 재정지출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저출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추세성장률이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그 보고서에서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게 혹시 뭘지를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의 경쟁 압력과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게 지방균형발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 불안을 꼽았습니다, 주거 불안. 이는 교육비, 의료비에 비해서도 저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출산·고령화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이 총 48조 3309억 원가량인데요 결산 집행액은 45조 원 수준입니다. 전체 저출생 예산 중 20.5조 원이 주거 관련 예산인데 전체의 44%에 달합니다. 저출산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도 저출생 예산 중 45%, 주거 분야인데 이처럼 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한 것도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원 예산 중에 청년 등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를 저출생 예산으로 잡은 것 때문에 과대계상된 측면이 먼저 있고요. 또 행복주택 용자·출자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총예산을 저출생 예산으로 역시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대상자를 고려한 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만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동의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대비 우리가 가족지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OECD에서도 반성을 하는 것이,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모아 주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출생 관련된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재정지출을 나름대로는 전부 다 효과성을 봐서 그 중의 3대 분야에 중점을 뒀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저출생에 가장 효과가 있을 재정지출 3개 분야, 일·가정 양립하고 돌봄 그다음에 주거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한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차규근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다음에 사회적인 구조개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번에 새로 다시 이 대책을 조금 더 효과성 있게……

○차규근 위원 이번에 개선한다고 발표하신 것을 들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차규근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아까 재정지출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규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늘리자는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닌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차규근 위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원 예산 20조 원 중의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의 용자 사업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금융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37조 원, 우리 GDP의 118.2%에 달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8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이 천문학적인 금융자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는 한 결코 집값은 안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를 가진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자산을 형성해서 아니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인 그런 과정의,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정책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규근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규근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금융시장 전체에 왜곡이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오늘 제가 이쪽을 질타한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 부족으로……

한편 부동산금융 중에 가계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합니다. 2020년까지 비중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계여신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자금의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값을 올린다면 저출생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장관님께서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시적으로 생각할 때 민생이나 내수 쪽, 내수의 체감 부분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을 여쭙보는 것은 어제 총리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총리님께서 너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공감의 안 되는 진짜 엉터리 경제 낙관론을 펴시나, 이래 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 났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세수결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직 저희가 추계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KDI 같은 데서는 이십 한 4조, 30조 결손 얘기하던데……. 지금 9월, 오늘 며칠입니까? 4일? 부총리께서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직 정확한 숫자가 추계가 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측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부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답변하시는데 세수결손도 아직 국민들한테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올해 세수결손 예측을? KDI에서도 예측을 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추계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수많은 참모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올해 세수결손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내부적으로 재추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일영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다 이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닙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아직 저희가 추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두 번째인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저효과,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타나는 거고.

가계부채도 부채율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 GDP 산출기준,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지요, GDP 산출기준 바뀐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GDP 산출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때……

○정일영 위원 가계부채, 가계부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GDP 산출기준이……

○정일영 위원 분모가 바뀌었잖아요, 분모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분모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줄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제가 묻는 건 분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래서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수경제, 소매 판매 9분기 연속 감소했지요? 감소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나라 가계빚 최고로, 지금 3000조 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체 절대규모는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주담대 증가 폭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총리, 부총리, 전부 우리 한국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물가 2%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생필품 물가는 그렇지도 않아요. 추석 앞두고……

자료 보십시오.

시금치, 배, 추석 차례상 비용 다 마찬가지고.

이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에 여윌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계의 여윌돈도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대출·세금 규제 다 완화한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중의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택거래량은 급상승했고 주택가격 거의 피크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정일영 위원 현재 우리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전국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정일영 위원 아니, 전국보다도 서울·수도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은 강남지역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5월, 6월부터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많이 걱정을 하고 지난 8월 8일 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약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생각 똑같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걱정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정일영 위원 공급이 충분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관계 부처에서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우선 장관님, 그 전에 아파트 청약할 때 청약 자격에 연봉 부부합산 이렇게 해서 그 연봉만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재산, 일종의 실수요자의 재산도 고려를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청약 자격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약점수제도 하고 특별공급도 해서……

○정일영 위원 물론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연봉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것, 아주 어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기들 숫자도 있고 다양한 요인을 넣어 가지고……

○정일영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여러 가지 재산 관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일영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좀 더 세련된 그런 청약 기준, 자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감위원장님 나오셨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금감위원장님에게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착륙 핑계를, 금리를 그때 많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부동산 등등 해 가지고 금리를 마구 낮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수요자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지요, 거의?

○**금융위원장 김병환** 전세대출까지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이제 막을 거라고 나왔더라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실수요자한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막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완전히 막아 놓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금리를 갑자기 판치금융으로 해서 올려 버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이 금리 올리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장님이 주로 결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정일영 위원** 그건 위원장님 얘기고 모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시해 가지고 열일곱 번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들에 대해서 연간 목표를 지키는 쪽으로 지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알겠고요. 그건 저하고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 PPT 자료 보면,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엇박자 나는 경제정책 때문에 세수결손, 재정 역할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안 하겠다 그러시고 대출정책도 오락가락하고 가계빚은 심각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GTX……

국토부장관님, GTX를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겠다 약속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GTX-A·B·C 노선 지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A노선은 3월 달에 1단계 구간을 개통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연말이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들어오는 게 또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데 GTX-B 노선 보면 불용액이 꽤 많고 지난 3월 달에 총선 앞두고 갑자기 착공식 했어요, 저희 지역에서. 국회의원인 저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착공식 하더니, 그래서 삽이라도 빨리 뜯 줄 알았는데 아직 삽도 안 뚫어요. 착공식 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어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GTX-B 구간은 재정구간이 있고 민자구간이 있는데요. 재정구간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민자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민자구간은 7월 11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일영 위원** 하여튼 장관님, 이것 빨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예타 제도……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예타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재부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게, 강남에 정부투자, SOC 등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강남에 많이 들어간 만큼 강남 노선을 통과하면 예타 걱정이 없어요. 많이 그냥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송도5동 같은 데 보면 5만 명이 새로 입주를 해서 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타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 문제인데요. 어디가 예비비 가장 많이 썼나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6087억, 2등이 산업통상자원부 1837억, 3등 보건복지부 1676억, 너무 예비비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이월·불용액을 보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가 엄청나게 쓰겠다고 해 놓고 또 이용·불용도 굉장히 많아요. 부총리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지……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6087억이라는 것을 제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국가 안전활동 지원 5161억 등등,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고 담당자 문제가 있으면 문책해야 될 거고, 국회의 사후승인도 앞으로 저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도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인데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의 장관님들은 그 원칙에 따라 사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장관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그리고 사변 또는 국가 위기상황일 때 발령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에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5·18 때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지난번 12·12 때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총알 정도가 날아가야지 발령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계엄령을 어떤 때 발령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 지금 계엄 계엄 하는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엄이 발령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되겠지요. 북한이 도발하면 틀림없이 발령되겠지요. 그다음에 국내 안에서 아주 심각한 테러나 또 심각한 내란에 혼란이 자초될 만한 일이 발생할 때 되겠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는 겁니다. 군인이 만들까요? 군인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군인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도 억제해서 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평시의 군인들의 임무입니다. 군인은 발령되는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또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세력들이 만들 수 있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 지금 계엄령 계엄령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의힘도 안 만들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우리 정부도 안 만들어요.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듭시다.

그런데 왜 자꾸 계엄 계엄을 얘기하지요, 전부 다 안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도대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까지 예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즉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1999년도에 처음 예비타당성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 2003년도에 보강을 하고 또 2019년도에 보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타에 문제가 많다고 연구원에서도 분석해서 나왔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부 개선 사안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한기호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해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나오고, 21대 국회 때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제도개선 발의가 국회에서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한 30건이었어요. 22대가 돼서도 벌써 몇 건 나왔는지 아십니까? 6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타에 대해서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500억 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정부지원금 300억에 대한 것이 사실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500억을 만들 때가 몇 년도에 만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99년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규모가 얼마 커졌어요? 한 6배 이상 커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커집니까? 다른 건 다 성장을 하는데 예타 돈은 전혀 성장을 안 하네요? 어떻게 기재부에서 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대책을 만들어 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에 더 가산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만 통과하면 예타가 통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 살리겠다고 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준다면 좀 지나치지만 소홀하지 않을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한기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한강하구 해도를 만들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북한에 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는 지금까지……

○한기호 위원 왜 장관님이 안 보십니까, 그 중요한 사안을, 해수부장관님이?

그런데 구주와 변호사가 이 해도를 좀 보자고 국가에다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안 줬지요? 왜 안 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거는 20년 9월에 비밀로 등재가 됐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안 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강하구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실,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 해도가 지금 몇 급 비밀로 분류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3급입니다.

○한기호 위원 삼급비밀을 북한에 그냥 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데 이게 관계기관 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비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준 다음에 삼급비밀로 만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한기호 위원 준 다음에 만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회답 내용에 대한 폴로……

○한기호 위원 해수부가 그렇게 국가에 대한 안보 관념이 없는 집단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설마 그러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안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가서 측량해 가지고 전부 해도를 줬는데? 장

관님이 드렸다는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앞서서 질의했던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실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강하구는, 우리가 제공했던 것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기준 점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홍수기라든가 갈수기에……

○한기호 위원 아니, 그걸 해서 주는 자체가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주는 게? 뭐 자꾸 변명을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때 정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과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에서 못 하게 하지요, 지금?

어디 있어요, 과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여기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못 하게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마 설립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한기호 위원 접경지역 농축산물에 대해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완전한 경쟁으로 가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 와서 다시 70%를 유지하자 이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왔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굉장히 구미를 당겨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군에 납품하면 한 번만 결정을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죽느냐?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인들에게 우리가 직접 생산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국방부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 안에서도 대기업 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환경부장관님, 지금 댐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변구역,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보전산지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강원도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강원도하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할 때 물 드셨을 텐데 그 물은 어디 물입니까? 강원도 물이지요, 팔당에서 가져오니까. 여러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에다 물값 내고 계십니까? 안 내지요? 왜 안 냅니까? 왜 물값 안 내고 드세요?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다목적댐이 있고 발전용 댐이 있습니다. 발전용 댐은 우리 국가의 자산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다목적댐과 발전용 댐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댐의 저수 물 양이 다른니까? 물 종류가 다른니까? 똑같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 댐이 발전을 하는 건지 다목적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목적댐과 발전용 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지요.

○**한기호 위원** 환경부장관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준비 중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국가가 실제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고 공짜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며칠째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가 고생해야 국민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장관님하고 주거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허종식 위원** 저는 비판하거나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젊은 분들 만나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의원님들 세대의 잘못으로 저희 세대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젊은층에게는 없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이나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분들은 아파트 사서 서울 들어오기 불가능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온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볼까 합니다.

장관님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8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발표했습니다.

○허종식 위원 여기 보시면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만 7000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급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씩 짚어 보려고 합니다.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 지원 강화한다,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조율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한다. 또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즉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분쟁 해소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젊은이들 이야기하셨는데 요 서울시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새로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마 거의 유일한.....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짚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빨리 당겨서 42만 호 중에 한 13만 호 정도는 재개발·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 대책의 내용입니다.

○허종식 위원 좋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주택 재개발, 치솟는 공사비에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곳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많은 곳에서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저기 보시면 서울 반포주공은 평당 공사비가 애초에는 548만 원이었는데 시공사에서 829만 원을 요구합니다. 쭉 내려와서 중간에 부산에 범천1-1구역은 당초 공사비가 539만 원인데 무려 926만 원을 요구해서 중단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 폭등 이것 때문에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다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빠르면 9월 중에 공사비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천 미추1구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한 지 지금 20일쯤 됐습니다. 1321가구가 들어서야 되고 당초 공사비가 465만 원인데 조합에서는 500만 원대 후반까지는 어떻게 하든 쥐 보겠다 하는데 605만 원을 요구합니다. 조합원들은 605만 원이면 집 안 짓겠다 이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 미추8구역입니다. 2825가구를 짓기 위해 지금 저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평당 424만 원인데 조합은 증액 최대치가 58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620만 원을 요구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화1구역입니다. 2331가구, 당초 공사비는 평당 465만 원인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 그래도 500만 원대 후반은 만들어 보겠다, 시공사는 605만 원을 요구해서 철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다 왔습니다.

인천 동구 금송지구입니다. 약 4000가구가 들어서는데, 당초 공사비는 430만 원쯤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52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500만 원 후반, 6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역시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단을 만드신다면 빨리 만드셔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지난주에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님을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또 새로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가치판단할 것이 아니고……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을 담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22대 국회에서 금년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넓은 마음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종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도 좀 해결책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허종식 위원 그래서 정부의 이 대책을 보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를 하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11만 가구.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허종식 위원 한번 보시지요, 얼마나 매입했는지. 2022년은 절반·절반이니까 정부 교체기니까 됐고요. 2023년에는 5563가구, 올해는 현재 2141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전 원희룡 장관님께서 비싸게 매입했다고 난리를 쳐서 누가 매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데 지금 대책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LH공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매입해 달라고 약정 신청 들어온 것이 한 10만 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빨리빨리 진척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빨리빨리 진척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금년 목표가 5만 6000호인데 매입과 인허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매입임대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로 중산층부터 서민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장관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의 노후주택,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세대·연립은 26.5%, 단독은 67%, 아파트는 19.5%입니다. 즉 전국에 집중해서, 20% 이상은 다 노후주택이어서 젊은 층은 이 노후주택에 한 분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즉 주택공급률 100%, 이걸 틀렸습니다. 20%는 빼야 됩니다. 왜? 누구도 안 가니까요. 전국에 빈집은 널널하게

많습니다. 안 가지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을 100% 이렇게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해석을 우리가 또 다르게 해 봐야 되겠지요. 수치는 수치기 때문에 그걸 또 빼고 할 수는 없는데……

○허종식 위원 아니, 집을 사려고 짓는데 가지 않는 집을 넣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허종식 위원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허종식 위원 다음 한번 또 보시지요.

1·2인 가구에 맞는 주택정책을 펴야 합니다. 지금은 3·4인 가구, 즉 국민주택 규모인 85㎡에 대해서는 의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어라 되어 있지요. 이번에 법안에도 그것 폐지해 달라고 들어와 있던데 1·2인 가구가 전체의 60~63%를 차지하는 이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지역에 지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좀 주택정책은 유연하게 한번 펴 보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1·2인 가구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를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비아파트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세금 중과 이런 것들을……

○허종식 위원 국민주택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32평형에서? 그게 3·4인 가구 기준인데 지금 1·2인 가구가 워낙 많으니까 정부의 주택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생각 없으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민주택 규모를 굳이 또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고요. 이미 사실은 3·4인 가구용 84㎡에서 60㎡로 사실상의 기준이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이게 전국에 17곳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 후보지가 38곳인데 한번 봐 보세요. 출자 지원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분양주택 못 해 준다, 뭐 그렇게 못 해 준다는 게 많아요. 기금 좀 지원해주셔 가지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전국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공급, 단계적 개발 또 단계적인 공급이 맞다. 다 안 되고 있어요, 저쪽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에 공급하는 건데 지금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가 지지난주에 국토위에서 그 법안을 2년 반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걸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주택기금 같은 것도 현장에 맞게 잘 조정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허종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쪽, 부천 쪽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재부 부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허종식 위원 똑같이 2022년 하나는 4월, 하나는 12월에 예타에 선정이 됐는데요. 중간에 기재부 총괄지침이 12월에 바뀌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그래서 2022년 12월에 지정된 기흥IC-양재IC는 예타가 통과가 됐고 그 전에 된 경인고속도로는 총괄지침 개정 전이라 해서 지금도 예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비단 허종식 위원님 지역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여야 구분 없이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다음은 서울 강남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이미 얘기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의 조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우선 파괴적인 물가상승의 고삐를 죄어야 했고 동시에 이러한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찾아올 때 이게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특히 금융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연착륙 전략을 시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중간에 선부터 재정 풀기는 다시 물가를 양등시켜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이 가장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약자복지에 이른바 핀셋형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동의가 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착륙의 터널 끝이 본 위원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연착륙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세심한 풀리시 믹스(policy mix)에 대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만 발표하면 안 되고 효과가 충분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새출발기금이 충분한지 또 동시에,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더라고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채권 발행을 하려

면 자본금이 충분한지 좀 챙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상의드렸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가와 싸우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관찰한 것은 도시 농산물은 비쌉니다. 구조적이지요. 농어촌 소득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조적입니다. 식량자급률은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역시 구조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의 구조적인 추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수산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근원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한 해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을 요청드리기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의 시작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타이트하게 협업드리겠고 오늘 제가 22대 국회 시작하는 첫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만큼 본 위원은 4년 동안 꾸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어서 대한민국에 가장 놀랍게도 구조적으로 높은 물가가 의식주입니다. 해서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박수민 위원 최근 8·8 대책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수민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 활성화,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심 아파트 공급 또 빌라 등 시장 정상화, 결론적으로 하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으로 이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시장이 먼저 이 금리인하를 예측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했지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장이 멈췄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지요. 적기에 대책은 잘 발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년 동안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공사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공급 확대의 실현을 저희가 시도하는 것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봐 주시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이 익히 아시는 도쿄 아자부 힐스의 복합개발 사례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주택, 오피스 그리고 상업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기에 학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도 있는 복합개발을 ‘콤팩트 시티’ 혹은 ‘N분 도시’로 이미 국토부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본 위원은 저 복합공간에서 엘리베이터로 젊은 세대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로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의 건축 기술로 이것은 혹시 불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수민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래서 제가 흔히 GTX를 놓아도 좋지만 GTX를 꼭 타지 않고 출근할 수 있는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갑게도 국토부가 이미 아이디어가 충분합니다. 작년 1월에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핵심 내용이 화이트 존인데 취지와 그간의 실적을 잠깐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국무위원들, 주거지역 나누고 또 공업지역 나누고 상업지역 나누는 전통적인 그런 zoning을 생각하는데요 요즘 추세는 복합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전 세계적인 도시계획 트렌드고요.

일명 화이트 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취지를 반영해서 작년 1월에 관련 법을 만들었고 지금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지난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총 16곳의 후보지를 신청받았습니다. 나중에 절차를 즉 진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기존의 도시계획 용도에 상관받지 않고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도는 설계하지만 주택건설의 인허가는 지자체에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것은 지자체하고 국토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민 위원 그런데 현장의 공무원들은 제가 만나 보면 새로운 인허가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복합개발을 해서 누군가 수혜를 받으면 생활의 편리성도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 제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가장 자주 들은 사자성어가 특혜 시비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어도 인허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이것이 탄생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법안이 혹시 더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구요, 현장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집행 모니터링도 할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기왕에 발표하신 좋은 대책이 현실화되도록 이 주택공급 착수 시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건설업체나 민간들이 잘 알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들을 상대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집값의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워낙, 집값에 미치는 요소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 페이지로 좀 모아 봤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릴 순서인데요.

대한민국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의 요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한때 ‘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값이’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의 모든 가격은 원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가는 영향을 주지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빠짐없이 모아서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실수 없는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수요는 주택을 원하는 가구의 수 그리고 가구의 소득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금융의 접근성 이게 가장 기본 요소고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수도권에 많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편중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 상당히 추세적이고 강력한 요인들입니다.

주택을 원하는 가구의 수는 핵가족, 1인 가족으로 계속 분화되어 왔고 가구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가장 빠르고 꾸준히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금융의 접근성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되고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종부세 같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때 공급을 놓치게 되면 집값은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뼈아프게도 외환위기 이후 저희는 두 차례의 집값 폭등을 겪었고 젊은 층들에게 좌절을 주었고 저출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즉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변동성 없는 공급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공급은 간단합니다. 건축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토 공간을 넓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저희가 착안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의 가용성, 양도세 완화, 국토공간 개발입니다.

보충질의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반갑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남해안의 반도 도시 또 도서, 섬을 365개 가지고 있는 여수로 옮겨 왔습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이 어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주철현 위원 어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기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우선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예결특위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현재 여수-순천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난 7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시겠지만 전국 1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가 여수 밖에 없습니다. 여수는 인구 28만이 거주하는 호남 제1의 산업도시기도 하고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남해안의 대표 해양관광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사타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국가도로망 계획에 꼭 좀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고속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신규 고속도로 건설하거나 이럴 때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를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여수 돌산 국도 17호선 4차선 확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산은 갯김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이라서 활어 위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고급 리조트하고 관광시설이 밀집해서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서 평소 안 막히던 길이 두세 시간 막히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짜증을 내시고 주민들도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신선한 수산물 같은 것을 팔 수가 없다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4년부터 시장을 거쳤는데 그때부터 올라온 민원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4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적극 검토해서 제발 좀 지역의 선출직들이 욕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KTX 문제인데요.

전라선 KTX가 알다시피 여수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지난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KTX 전용 노선을 좀 건설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윤 대통령께서도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 국토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한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1조 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아까 말했던 전용 노선 건설하려면 최소한 3조 원이 넘게 들어 가는데 국토부의 2월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1조 원 들어서 10분 단축하는 것으로 축소

발표가 돼서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약속인데 국토부가 이렇게 안 지키면 되느냐라는 원성이 자자한데요.

저도 담당 국장으로부터 개별적인 이야기도 듣고 보고도 받았습시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전라선 고속철도 문제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남도하고도 저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예, 부탁을 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변에 경유지 등 지역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차함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KTX, 여수는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이나까 주로 KTX 타고 다니는데 KTX 환불 수수료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KTX 환불 위약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매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도 세종에서 매일 타고 다녀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제가 또 주무장관이다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KTX 위약금이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SRT는 이것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SRT와 KTX 위약금이 다른 것을 도대체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옛날에 창구에서 사람들이 직접 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약금 높게 받는 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창구 판매율은 8.7%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취소를 하는 이런 표에 대해서 88.4%가 바로 재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KTX 측이 손해가 없어요, 인건비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런데 5%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 5년간에 KTX가 위약금 수수료로 무려 865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SRT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위약금을 좀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취지인가요?

○주철현 위원 좀 낮추고 SRT와 비슷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019년에 이미 한번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낮춘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능한지…… 사실은 KTX, 코레일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한 영업손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약 수수료 받아서 버는 돈보다 노쇼로 해서 상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노쇼에서 그 표들의 88% 이상이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철현 위원** 돌산 향일암 거북머리 일대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2015년 제가 시장 때 군부대 재건축 문제와 관련돼서 민원이 일어서 당시에 여수시하고 주민들하고 국방부하고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해서 거북머리 일대에—이것 국립공원 구역인데요—해안데크길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고 당시에 국방부도 환경부 의사를 확인했고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 원도 환경부의 동의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군부대 주변에 해안데크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국방부든 환경부든 똑같이 국가가 여수시하고 시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주민들께서 거북머리 군부대 주변에 해안데크길보다는 임포에서 향일암 밑 절벽을 통해서 성두까지 이어지는 해안난간데크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국립공원 구역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환경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안난간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절벽난간길을.

향일암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향일암 주변은 워낙 경관이 좋아서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해수관음기도도량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해안절벽난간길을 만들게 되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주철현 위원** 산자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주철현 위원** 우리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인데 요즘 참 어둡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든 이게 지금 지속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고 시민들 걱정이 많은데 연간 10조 원 가까운 국세를 국가에서 계속 걷어 갔어요. 우리 시민들은 환경오염, 안전 위험 감내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묵묵히 지켜보고 일자리 하나로 만족했었는데 이제 만약 이것이 석유화학산단이 안 되면 여수는 먹고살 게 없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이 여수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많이 국세 걷어 갔는데 살리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석유화학산업이 산업 연관도로 하면 1위고 제조업 중에, 수출로 해도 우리나라 4위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석유화학산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저희가 발표하고 지금 업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 지원 방안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의 업종 신수종 변화가 필요한데 여수가 해상풍력이 11개소 4.85GW가 허가가 나 있는데 전력계통선이 없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을 못 하고 알다시피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줘 놓고 전력계통선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삼을 못 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산자부하고 한전이 너무 엇박자를 내서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소위 전남 전체로 봐서도 재생에너지가 전국의 절반 이상,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절반 이상이던데 그것과 관련된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발표를 해서 가지고 저희가 7년 이상 지금 새로운 재생에너지 허가 같은 게 안 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쪽 지역에 11GW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있고 31년까지 32GW 대기물량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저희가 32년 이후에 접속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허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허수 사업자 점검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0.6GW 확보를 해 놓고 있고 25년까지 저희가 5GW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망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여유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망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같이 이번에 힘을 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전력망 확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관심 갖고 예결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입니다.

먼저 기재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만금은 어제 또 엇그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전북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걸려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영남 지역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선 직후에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새만금 둘러보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잼버리 사태 이후에 이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됐다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됐었지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마저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서 다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적정성 검토에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게 다른 자료가 아니고 그냥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8월 26일 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했다 이것만 보여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탁드린 그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원래 기본적인, 예를 들면 계획이나 요구안이 있었는데 적정성 재검토 결과 수요예측 같은 것들을 좀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요도 바꾸고 그다음 공급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모를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사업별로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내역을 원하시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서 그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좀 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료로 드리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내용 자체가 기술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요 세세한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그 내용을 잘 아는 그분에게 해 가지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번에 사업 반영된 것 중에 대부분 자치도 요구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중에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에서는 아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저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검토에서 물론 100% 반영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내부적인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업이 이 검토 때문에 1년간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어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기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난해 8월 달에 원희룡 전 장관께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보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에다 플러스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국토부에서 이 지체된 시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 시간에 윤준병 위원님 질의도 유사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시다라는 보상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획된 사업들을 더 잘하기 위해

서 적정성 검토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나와 있는 개선 사항을 담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8월 26일 날 신속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회의한 것은 제가 봤어요. 이것도 8월 21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라북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요구를 하니깐 그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리고 일단 다른 부처 소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토부와 또 새만금청 소관 예산은 사실은 25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소요할 수…… 예산이라는 게 돈이 있어도 현장이 안 돌아가면 또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은 다 반영이 됐고요.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될 텐데 청장의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우선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6600억인데 올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의해서 8800억으로 예산이 한 2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정부의 건축재정에도 이렇게 예산 증액을, 새만금에 대한 증액을 시켜 줬고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그런 민간투자 유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10조 1000억 원의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련된 예산은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도 다 세워졌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내년까지 수립하는 과정은 빅픽처를 그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으로 새만금의 1억 2000만 평의 방대한 토지를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그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T 넘겨 주세요.

새만금 농생명 사업 관련 예산이 부분을, 저런 정도로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여기 산자부장관님 와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여기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최근에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엄청난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장애물이 생겼어요. 8월 26일 날 이 수주에서 탈락한 미국과 프랑스 원전기업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모 언론에 났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기 원천기술을 도용했다고 지금 탄지를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EDF에서 입찰의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기업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걸 소송을 가지고 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하고 있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체코 정부 측이 탈락자들은 이의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체코의 대표단들이 방한을 해서 양국의 산업관계와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수원에서 나와 계신가요? 한수원은 안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위험 관리나 사고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체코뿐만 아니고 체코 인근의 폴란드랄지 동유럽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리를 좀 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미국하고 좋은 원자력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팀 코러스(KOR-US)의 조인트 파트너십(joint partnership)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의 수요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율의 황정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은 부총리께서 잘못된 보도다라고 해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국민의 생명을 불모 삼아서 전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인식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의사가 아니라 국민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변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부총리께서 해명 자료를 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의사는 의료개혁의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동반자지요. 어떻게 반국가세력이 되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서 고통받는 국민들 그리고 아무런 말도 듣지 않으려는 독선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책에 어느 하나 반기라도 들면 즉시 타도의 대상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 직접 가 보라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의 99%가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현실에서 눈을 돌리니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가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끼얹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의료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가 봤고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응급실 숫자뿐만 아니라 병상 숫자 그다음에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숫자도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누가요?

○**황정아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취지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여러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황정아 위원**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우리의 불안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직후에 강원대병원마저 응급실 성인 저녁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세종충남대병원도 건국대충주병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아주대병원도 매주 목요일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어제 브리핑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의료현장에서 이렇게 비명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 달나라에라도 살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총리께서 의료대란의 책임이, 그 시작이 전공의의 자리 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도 하지 못할 망발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응급실 뽕뽕이가 일부 현장만의 이야기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일부 현장?

119구급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지만 수속이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이라며 병원 측에 다급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뇌혈전 의심 중학생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40대 임신부는 1시간 동안 병원 26곳이 거절해서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고, 2살 아이가 응급실 뽕뽕이를 돌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아기가 너무 위급하다고 절규하는데도 의료진이 없다고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런데도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2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박민수 차관의 망언처럼 전화로 물어볼 정도였으니 경증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박민수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응급의료기관에 가시면 의료진들께서 KTAS라고 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드릴 겁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까지 추락할 생각입니까?

2살 아이가 의식불명이라는 끔찍한 소식에 정말 분노만 치밀니다.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베텅을 일삼는 도박꾼이 되었습니까.

지역에서는 배후진료 위기로 환자들이 이미 권역을 넘나들면서 진료 받을 병원을 찾아서 뽕뽕이를 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영양가 없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면 의료대란이 해결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응급실 부족 문제는……

○황정아 위원 묻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답하세요.

그냥 경증환자를 응급실 못 오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지자체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적립해 둔 재난관리기금까지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야 꺼내는 그 쌈짓돈을 쓰라고 하는 게 무슨 껀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재난으로 간주한다는 게 왜 그렇게 무리한 규정이지요?

○황정아 위원 의료 재난,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는 것은 의료 재난 상태임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래서 저희는 재난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고 중대본을 운영하고……

○황정아 위원 그러면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그렇게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중재안까지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기가 끝이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 문지마 증원, 그 배정위조차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는지 회의자료들까지 파기해서 감춘 독재 정책, 밀실행정 아닙니까?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와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게다가 질병청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개화 시즌이고 곧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하순에 코로나19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3%p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상 검출률은 여전히 40%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검출률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절대량으로 이전 대비 10배 이상으로 훨씬 높지 않습니까? 말로만 괜찮다 하고 말을 하면 위기가 사라집니까?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물리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며 의료대란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건 질병청장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환자 수나 입원 수가 확연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님, 저희가 다층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또 하수 감시 또 병원체 감시를 다 수행하고 있는데 모든 감시체계에서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황정아 위원 현장에서의 체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안일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 그것 확실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숫자는 보고 있고요. 실상 검출률은 여전히 4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보다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라는 게 무슨 대책입니까. 응급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를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의료 붕괴 사태를 어떻게 막을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수치는 그대로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러한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요.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오만과 독선을 고치기는커녕 추석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유체 이탈 화법의 지시만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도한 정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의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국무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중기부장관입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얼마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5조 5000억 원 정부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임호선 위원** 금년은 얼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금년은 5조 원 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작년에는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작년에는 4조 원입니다.

○**임호선 위원** 작년 4조 원 중에서 실제 발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실제 발행이 2조 한 6000억 원 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희들이 파악한 건 2조 242억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월해서 전반기에 저희가 또 발행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24년도로 이월해 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금년도는 5조 중에서 지금 얼마 발행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금년도는 한 2조 4000억 원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 오늘 추석 관련 특별판매를 하면서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올해 5조 다 판매 가능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판매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하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들 저희가 많이 지정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작년 목표액이 4조였는데 2조밖에 판매, 실제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용처가 사실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세 가지 종류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형 상품권을 2022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발행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카드형 발행이 한 16%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류 같은 경우에는 부정 유통 같은 것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충전 전용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논란 해소됐습니까, 해소 안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가계약법 위반이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호선 위원 23년도 4월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논란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사실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매출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반 토막밖에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부총리님,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1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23년도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3년도요?

○임호선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0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20.9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여러 가지 저희들……

○임호선 위원 중요한 건 국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금 담어져 있지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 이유는 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 발행하고 운영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건 할인 지원

부분인데 할인 지원은 지금 지자체의 사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간에는 그런…… 제가 행안위에서 4년을 이 업무를 다뤄서 너무 잘 알지요.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율도 좀 차등을 뒀고. 저는 이 지원 시책은, 이게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です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는 걸로 하세요.

○임호선 위원 예.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축소해서 더 많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태서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서민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저 표를 한번 보시면, 23회계연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거든요. 3025억 들여 가지고 완속 충전기 6만 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올해는 4365억 투입될 예정이고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임호선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일단 충전기 안전 문제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충전기가 그동안에 급속 충전기와 달리 완속 충전기는 과충전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2만 대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그런 기능을 하는……

○임호선 위원 완속이 지금 64%. 그런데 지하에 설치돼 가지고 입주민들이, 전기차 지하 출입 통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28일 날 발표를 보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대에서 9만 5000대로 확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금년 예산 2만 대고요. 24년 금년 예산 2만 대, 내년에는 신규 7만 1000대 하고……

○임호선 위원 합쳐서.

○환경부장관 김완섭 또 교체하는 게 2만 대 해서 합쳐서 9만 1000대입니다.

○임호선 위원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임호선 위원 21일 국토위 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지요, ‘과충전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는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충전 문제하고 화재하고는 객관적인 연관성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다수입니다.

○임호선 위원 현대·기아차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충전량과 관련 없고 셀 자체의 제조 불량 또 외부 충격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게 아마, 주류 의견이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완속 충전기를,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춘 이런 걸 보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치 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국토부장관님, 작년에 연구용역한 것, ‘주차장 구조·안전 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살펴보신 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원칙적 지상 설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 3층 이내는 설치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조만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그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기본 방향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 문제를 좀 더 충실히 관리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임호선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부처 간에 이의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선 위원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놓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조만간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임호선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임호선 위원 전기요금 개편 지금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임호선 위원 그걸 인상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천명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수립 방안 연구용역하신 바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임호선 위원 저희들도 농해수위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거든요. 그래서 농해수위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한번 다뤘는데 판매단가가 2021년도 46원에서 23년도 75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엄청난 인상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양식장 전력 사용 현황을 보면 1247원에서 2050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인상이 됐거든요. 지금 농어민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 농어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호선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꼭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님하고 농림식품부장관님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위원장님, 환경부장관 잠깐……

○위원장 박정 무슨 발언……

○환경부장관 김완섭 의견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완섭 제가 아까 답변 중에 과충전을 예방하는 충전기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국토부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과충전이라는 뜻은 배터리 자체가 100%까지, 보통 95%까지 충전이 돼도 위험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자들이 볼 때 과충전이 화재 발생과 큰 논란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0%를 넘어서, 즉 만충을 넘어서 갈 때, 그럴 때 제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부 합동으로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정부 내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 이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을 하더라도 계속 충전이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설정한, 예를 들어서 85%면 85% 또는 스스로 옵티마이즈(optimize)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개발돼 있어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스스로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충전기가 끊는 기능이 급속만 있고 완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속도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감사원장님, 공직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 또 가짜뉴스, 괴담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예산을 쓰게 만들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요, 사안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선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최근에 일부 세력들의 괴담 선동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광주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처리수, 최근에는 뉴라이트에 무슨 계엄까지.

사실 국민이 좀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킬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 선동하는 것 이것 정말 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승수 위원** 앞서 일부 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원전산업,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신념과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사실 우리 원전산업을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고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들은 여기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 종사자 또 기업 매출, 고용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우리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원전산업이 회복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원전 생태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전기업 매출은 4조 정도 그사이에 증가를 했고, 원전 관련 설비 수출 계약을 보면 문제인 정부 5년 동안 600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무려 4조,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과 면담을 했지요. 거기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한국이 최종 계약을 딸 것이다, 확신한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원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EU가 2022년부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을 충족 못 하면 앞서 체코 원전 수출과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수출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고리원전, 한울 이런 쪽의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이 거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실 정말 마음이 급한 것은 이미 방폐장 설치를 시작했던 것이 한 40년 전 아닙니까, 보면? 결국은 고준위 방폐장 설치할 데가 없어서 중저준위를 경주에 억지로 20년 만에 설치를 했고 지금도 보면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법안부터 먼저 통과됐어야 되는데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법안은 새로 제출이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도 아직 그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이 통과돼야 부지 확보부터 뭔가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법안 통과되고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이 한 37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 시점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산자위, 22대 국회에 와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둘러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원전산업 자체도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산업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고 있는 경주에…… 원래 법에 따라서 방폐장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거기로, 경주로 이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경주가 발각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아마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 해외수출사업본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고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고준위 방폐장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그나마 받아줘 가지고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부가 추진한 바는 없고요. 아마 한수원 내부에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검토하는 것조차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승수 위원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시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정말 해가 바뀔수록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 성과도 좋고 집행률도 좋은데 출생률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출산율과 관련이 적은 예산이 포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증가 추이와 합계출산율 추이가 방향이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등이 가렵고 아픈데 진짜 다리를 굽은 격입니다. 전혀 효과 없는 사업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좀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로 재배치가 됐습시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새로운 사업들도 철저하게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효과성이 적은 사업들은 중단시키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권익위가 출산양육지원금 1억을 지원한다는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 62.58%가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1억 지급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정책으로 도입할 그런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 제안 자체를 바로 정책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양립, 양육 그리고 주거, 이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책을 펼쳐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출산 극복 모범사례로 헝가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출생아 수에 따라 가지고 아주 초저금리 대출에서 출생아 수가 많아질수록 원금까지 일부 국가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취지는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에서,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인 정책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전략기획부가 생기면 그런 쪽의 정책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부처 간 예산 협업 같은 것들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 청소년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자살률 압도적으로 1위인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승수 위원**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특히 20대 30대 10대의 사망 원인은 거의 한 50% 가까이, 20대는 50% 이상 그런 극단적 선택이 사망의 원인인데 1년에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아까운 생명이 지금 희생돼 버리고 있는데 1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0명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생률에 0.04%가 더해집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게 반복, 누적이 되어 버리면 진짜 출생률 1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좀 약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울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기재부에 간단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티메프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부총리께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사의 근거. 그런데 1페이지짜리로 왔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예정처에서 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붙였으면 그 항목별로 거기에 대한 대응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이 문제 국정감사까지 계속 다 물어볼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하튼 그것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티메프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과 관련 부처에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최근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또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또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22년 6월에 티몬·위메프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분기별로 개선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거지요?

실제 이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이 이행실적보고서도 상당히 뜬 들이다가 늦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이 상황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부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때도 질문을 주셔서 가지고 제가 금감원하고 협의를 챙겨 보고 있는데 아마……

○**오기형 위원** 개별적으로 와서 약간 보여 주고 말겠다는데 이것 지금 숨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평가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챙겨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금감원하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것 같이 서로 보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건 관련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님 아시겠지 마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이 나올 수도 있고 한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정 의견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 상장의 폐지……

○**오기형 위원** 거래중지가 바로 나옵니다. 한정 의견이면 바로 거래중지가 나옵니다.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위메프나 티몬은 2022회계연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온 거고 2023회계연도 것은 올해 3월 달, 4월 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 그 시기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보면 본문 처음에 이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메프의 22년도·23년도, 티몬은 22년도 그리고 티몬의 23회계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가 올해 3월·4월 달에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분기별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짚어 보면 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22회계

연도 모두, 23회계연도 마찬가지.

두 번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초과액이 자산을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그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그걸 분석만 한다면 이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구나, 계속하다가 뭔가 사고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거래를 자제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원인이 없고 또 다른 홍보들을 하니까, 또는 정부에서 후원하는 업체인 것처럼 정부에 약간 오해 살 일도 생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방치한 거지요.

그리고 이 회사의 피해자가 두 부류지 않습니까? 소비자하고 그다음 판매업자, 점포에 들어가는. 그런데 특히 판매업자들의 거래액이 5·6·7월 급증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티몬 같은 경우에 4월 달 이전에 이 문제가 됐다고 워닝(warning)을 했으면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판매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그 팀에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사실 MOU를 맺고 하는 것 자체가, 감독 당국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 어떤 시정명령을 하거나 일반 금융회사에 하듯이 적기시정조치 명령에 따라서 증거를 명령을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던 부분이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 제약이 됐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약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것인가 그 시각에서 이 질문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후속 피해 지원대책으로 대출금리 낮춰달라 그런 주장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무조건 재앙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토론의 여지라고 봅니다, 사회적 재난일 것인가. 하지만 이 사건 자체에서 금융감독원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뭉갤 수 없는 사안이다 그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간담회를 몇 번 해 보니까, 여기 중소벤처부장관님도 계시는데 중소벤처부의 담당 과장, 한 두세 번 간담회 했는데 되게 성의껏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오신 분 중에서 저는 그분 되게 고맙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추가할 말씀도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오기형 위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이었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했고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에서 거의 했고 그다음에 일반 판매업자들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부의 담당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또 협력이 안 된다,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 그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후속조치해 나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도개선 문제가 좀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잠깐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건은 사실상 그림자금융의 문제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돈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폰지사기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사기로 기소, 수사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금융의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문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문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금융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들을 금융위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개선 대안들을?

○**금융위원장 김병환** 범부처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가지고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것은 올 하반기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율규제 그만하고 제도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자율규제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법제화를 검토하고 곧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기형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할 때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는 금융위원장께 가계부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3.5% 멈추겠다 이러니까 일각에서 조기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대통령실도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이 적절한가 저는 그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특히 금융당국의 책임자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제도 이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그전에 지난 십여 년 동안의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성공적이었는가, 별로 성과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되게 했는가. 제가 문재인 정부 잘했다, 윤석열 정부 못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의 금융 당국의 행태가 계속 이랬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40년 모기지 또는 주금공에서는 50년 모기지, 이것 주금공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따라서 했고요. 나중에 이게 비판되자마자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관치금융하듯이 ‘뭐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42조 원 공급했고 올해 1월 달부터 신생아특례대출, 국토부에서 한 것인데 32조 원 출시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니까 금리가 1%였습니다. 이것 돈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는 것 두 달 전 이야기하다가, 논쟁하다가 일주일 전에 연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말은 좌회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우회전하는 행보를 거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직접 주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야 큰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뭐 하나’라고 금융 당국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 통화정책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22년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2년, 23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정착될 건지를 걱정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정책 조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용이 지금 봐서는 조금 오락가락이지만 그 당시 정책으로는 정합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제가 지난 이삼 년 동안 보면 한국은행은 일관되게 문제 제기했었는데 금융 당국이 계속 오락가락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의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경제부총리께 PPT를 보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디지털 포용 정책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한민수 위원**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는데요, 디지털 포용 정책. 이 정책은 사회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디지털에 약하신 분들, 역량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한다 그런 인식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정책에 있어 가지고 차별이나 배제 없이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범부처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이 마련됐고 과기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역량 교육인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디지털배움터 관련해서 취재를 해 보니까 특히 도서·산간 지역을 찾아가는 배움터, 키오스크, VR 기기 등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디지털체험존 이런 현장체험형 교육도 많이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한 80만 명 그리고 2023년에는 한 100만 명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과기부도 자체적으로 고령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디지털교육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우수하다는 사례로 뽑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따져 보니까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여전히 한 75%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저는 디지털배움터 이런 게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시겠습니까만, 제가 묻는 취지를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저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업 집행률도 우수하고 평가도 좋은 이런 사업인데 너무 많이 깎였어요. 2023년도에 690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 279억 원, 400억 원 넘게 삭감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1000개 넘는, 1011개소가 있었는데 23년도에 갑작스럽게 거점센터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36개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깎이면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과기부하고 운영한다고 합시다마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글썽요, 이것을 제가 다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기부장관이 저보다 더……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디지털, 이것을 디바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 문제 인식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떤 전용 교육장을 물리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온라인도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교육과 그 외에 좀 더 어떻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결로 이 교육 자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저는……

○한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6개소, 서울 같은 경우는 137개소가 있다가 지금 4개소로 줄었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구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 비율이 23.4%로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에서는 만족도도 높고 분명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36개소, 제가 기재부 부총리님께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과기부에서는 내년도에 이 36개소에다가 6~7개 정도를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정부안 제출 과정에서 또 좌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세입세출의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수혜 대상이 매년 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한민수 위원 보니까 연 35만 원, 8만~1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것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디지털배움터가 잘된 사업인데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 이 부분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정부를 떠나서 연속성 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디지털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이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방법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뀌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인식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도 깎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것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요. 조금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도 이게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바꾸면서도 교육 대상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네이처 인텍스에 나온 한국 관련된 특집기사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보면 보도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나라가 R&D 투자 대비 성과가 놀랄 만큼 적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도 준비를 했는데, 지난 6월에 네이처 인텍스에 보면 과학 분야별로 한국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략적으로 8위, 14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기부는, 2023년도 네이처 인텍스하고 우리 과기부 평가가 아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우리 정부에서는 성과율이 대부분 100% 넘고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일단 네이처지가 지금 평가하는 이 시스템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래도 전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뛰어나지 않다 이런 것은 뭐……

○한민수 위원 장관님, 그런데 일부를 보면요 과기부에서는 한 245%를 달성했다고 하는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PPT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과기부가 자체 성과를 매우 소극적이고 좀 작게 설정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달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한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것 보면 여성 과학 인력들을 보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자

료를 보면 여성 연구원의 비율이 한 20%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윗 직급으로 올라가면 10%대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기부 성인지 결산서 이런 것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 괴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R&D 예산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줄속 삭감됐다고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속 삭감되다 보니까 연구가 중지된 사업이—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99개입니다. 과기부만 99개 사업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로 인해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5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R&D 부분은 우리 과학계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내년 예산은 다시 또 복원 수준을 했습니다만 너무 줄속적으로 한꺼번에 삭감되면서 우리 과학인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또 중단되는 사업도 100개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도 필요하고 치밀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지속돼야 할 것은 다시 또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질의는 윤종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정 언제 바꿨어요?

○김태선 위원 행정실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위원장 박정 누구랑 바꾸셨어요?

○김태선 위원 윤종오 위원하고요.

○위원장 박정 예.

그러면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저는 플랫폼 택배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 올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사망자……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296명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7명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지난 6월에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지고 지난 12일에는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했던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일하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물류와 택배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4년간 1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혹시 쿠팡 야간 로켓배송 택배 노동자로 일하다가 숨진 고 정슬기 씨 들어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김태선 위원** 정슬기 씨가 했던 노동에 대해서도 그러면 들어 보셨을 것 같고, 정슬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정슬기 씨는 쿠팡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쿠팡은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가 있고요, 택배회사 쿠팡CLS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김태선 위원** 국토부장관님도 이 부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생활물류법 저희 국토부 소관입니다.

○**김태선 위원** 쿠팡은 올 2분기 매출만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매출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고용 인원만 7만 명이 넘는 이미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쿠팡의 택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CLS는 택배업계에서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업 운영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김태선 위원** 지난 2021년도에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노동자대책위 그리고 택배사,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소비자단체 등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강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주 60시간 노동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하고 정부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CLS는 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 정슬기 씨 같은 경우는 배송과 무관한 분류 작업에 동원되고 물건을 싣는 캠프와 배송지 사이에 하룻밤에 세 번이나 왕복하는 등 쿠팡CLS로부터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해라’라는 독촉 문자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쿠팡CLS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태선 위원 이 부분이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회적 합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1년 6월 달에 있었고요, 그런데 쿠팡CLS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저희 부로서는 이 사회적 합의가 자발적인 합의기 때문에 경찰력처럼 강제적으로 단속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택배사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지금 쿠팡CLS는 장관님 말씀대로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어쩌면 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가 택배서비스 업자의 등록 요건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 과정을 다른 택배사들은 다 준수하고 있는데 쿠팡CLS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법한지 안 한지는 다시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선 위원 이것은 생활물류산업발전법에 보면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회적 합의 참여 자체가……

○김태선 위원 사회적 합의 말고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그것에 따르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만약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엄정하게 현행법에 근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생활물류법에 따라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쿠팡CLS는 무시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물량을 조정하며 고정된 구역도 없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해고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해고하고요 극한의 노동조건으로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쿠팡에 새벽에 한 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류 환경도 봤는데 너무 더운 날 새벽에 에어컨도 없이 물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장관님, 혹시 던 미스(Done-miss)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던 미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말씀은 처음 들어 봅니다.

○김태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쿠팡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못 할 경우에 이를 던 미스라고 하고 이게 바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태선 위원** 그래서 고 정슬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로 배송 알바까지 쓰면서 아침 7시 배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쿠팡CLS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과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쿠팡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면 지도 감독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환경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조건 이행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서 1300만 명의 식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곳이지요.

지난 10년 동안 120건의 환경 법령 위반이 적발되었고 90차례 이상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97년 이후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폐쇄가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과 제련소장이 구속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김태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이사하고 제련소장이 구속되면서 원래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이 좀 불투명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이행을 못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경우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을 촉구할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일단 금년에 통합허가가 아시다시피 총 103건이 나갔는데 그중에 금년 6월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던 84건은 현재는 이행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이 구속돼 가지고 어떻게 통합허가 조건을 지켜 나갈지 그것은 저희가 그쪽 회사 내부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대표이사한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통합허가는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선 위원**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래서 이전한다고 하면 어디로 이전할지 그것 또한 환경부에서 한번 꼭 좀 챙겨 봐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계속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장시간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대화니까 서로들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8월 누계로 제가 확인시켜 드렸지요. 총리님께서 무역수지 막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 8월 누계를 아직 회복을 못 했지요, 4700억 달러. 24년도 4500억 달러, 아직 회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수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입이 더 줄어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장을 우리가 불황형 흑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대 주력 산업들이 전부 골고루 다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특히 특정 업종들, 올해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특정 업종이 아니라 10대 주력 산업들이 다 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15대 관리하지요, 물품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중에 10대 산업이 전부 다 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22년도 수출실적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게 팩트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고용 문제 제가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7월 달 청년고용지표를 보니까요 몇 안 되더라고요, 97년 이후에. IMF 때가 청년 일자리 증감이 한 마이너스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뒤로 기사 보니까 몇 안 돼요.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현재 같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4만 9000명, 마이너스 15만 명 정도는 되게 중대한 통계 수치로 제가 인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부분은 인구 증감, 지금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IMF 때랑 비교를 표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인구 증감 효과를 빼면 고용률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조금…… 부분이 있고 최근에 청년층의 쉬었음이 늘어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고용률 자체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일자리 통계를 통계청에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작성을 하나면 어느 쪽에 주로 타깃이 되고 어느 쪽에 정책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65세 이상만 34만 명입니다, 단기일자리. 지금 청년 고용절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체감실업률은 매우 다를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만 고용률은 괜찮습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요, 저희는 고용률은 괜찮은데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의 체감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올케어센터라든지 이분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위변제 건수 제가 보는데요.

금융위원장님, 소상공인 지원대책 25조 원 중에 혹시 재정 투입을 신규로 넣은 것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번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예산안 말고 이번에 25조 원 발표했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25조 원은 채무 조정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합산을 한 거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정도 돼요, 25조 원 중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25조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로는요 25조 원 중에 추가 재정 투입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배수 올리고요. 그렇지요? 운용배수 늘리면 돼요. 추가적으로 범위 넓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 쪽에서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용배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적정 운용배수가 5배수인데 지금 7배수 8배수,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수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하지요? 재정 투입을 통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보, 기보 이런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시 출연금을 줘야지요. 그게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운용배수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당연히 보증배수……

○**김영환 위원** 지금 대위변제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영환 위원**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위변제 건수하고 금액?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 부분은 코로나 때 굉장히 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위변제가 4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운용량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배수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보증배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갑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증배수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하게 재정 투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나중에는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아까 재정 말씀해 주셨는데요 25조 중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한 3000억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이번에 25조 원 발표한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예산은 이제 또 하니까 그때 한번 보면 되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21년 증가했다가 22년 잠깐 떨어졌다가 23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이 지금 되게 어렵다.

그다음에 월평균 임금, 고용노동부장관님, 그쪽 데이터입니다. 실질임금 22년, 23년 마이너스예요. 고용노동부 나오는 보도 자료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확인만 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님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계실질소득 추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동. 그러다가……

○**통계청장 이형일** 가장 최근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0.8%, 지금 간신히 올라온 겁니다. 저 0% 제가 기준선 그어놨지요?

그다음에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흑자액 증감률,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요? 내수, 소비, 가계 쪽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쪽까지.

그러면 정부의 기존 정책들은 뭐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씀은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부총리님. 제가 그래서 세계 석학들의 저널들을 다 한번 보고 유명한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부총리님, 저런 저널들 한번 살펴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2017년 미국에서 택스 커츠 앤드 잡스 액트(Tax Cuts and Jobs Act)라고 저게 택스 컷을 하면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액트를 통과시켰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미연구소에서 워킹 페이퍼로 발표한 건데요. 법인세 징수액은 41% 감소했고요 세수 퍼드백 효과는 2%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미국 자본증가율은 7%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8개국, 1965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한 주요 감세정책 경제효과 분석이었어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1인당 실질GDP, 실업률, 기업투자 등 국가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세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유명한 교수인데요.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 계층별 세금 변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큰 효과 없었다, 낙수 효과에 의문이다. 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보이시지요? 세금정책이 소득분배에서 타게티드 로우어 인 디

인컴 디스트리뷰션(targeted lower in the income distribution). 그러니까 소득분배에서 하위계층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널만 읽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 관련 42개의 연구에서 441개의 추정치를 분석해서 다시 분석해 봤어요. 법인세 감세와 경제성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잘 아시지요, 노벨경제학상 받으신 분, 스티글리츠. 부자·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지금 우리나라, 저걸로는 제가 어떻게 분석의 틀은 만들지 못하겠지만 지금 법인세 효과? 현금유보만 늘리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제 여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걱정 법인세, 하도 감세해서 재정적자하고 무역적자가 같이 오니까 같이 경선하다가 조지 부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당 경제학이라고 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여파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던 겁니다.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요.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세정책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을 모두 부자감세라고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김영환 위원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김영환 위원 감세라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감세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조세정책 중의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R&D를 할 때 지원하는 것도 감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막연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기업이나 그다음에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것 말고……

○김영환 위원 그러면 뭘 기대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투자라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김영환 위원 투자보조금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R&D 세액공제라든지 저희가 아는 세제 인센티브도 모두 대기업한테 많이 가니까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환 위원** 부자감세는 제가 따로 두 번째 질의 때 어떤 게 부자감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군위갑 출신의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부총리님!

반갑습니다.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23년도 결산을 보다 보니 기금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기금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관련된 로드맵 수립하고 관련된 재정사업 추진했던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중장기적인 재정사업을 하려면 실은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 제대로 잘 수립하고 또 전체 시장이라든지 소요 재원 같은 것들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아실 텐데,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기금들이 상당히 부실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환경부장관님 혹시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최은석 위원** 2020년에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 추진된 이후로 에너지특별회계가 건전성이 많이 훼손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최은석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여러 가지 투자도 있었습시다만 세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환경부 사업 중의 상당수가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그 사업 지출 소요가 컸습니다.

○**최은석 위원** 작년 23년을 보면 전기·수소차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기금예산의 한 53.4% 정도 아마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최은석 위원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전기차 같은 경우에 23년에 예산이 한 1조쯤 됐습니다.

○최은석 위원 장관님,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캐즘(Chasm)이라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최은석 위원 이런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된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전망을 하고 에너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 실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 가지고 캐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나아갈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아갈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 그리고 편리성 문제 또 가성비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문제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충전소 확충 문제, 여러 가지 등등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은 살펴보는 걸 넘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수소차에 관련된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글로벌 전체 이 산업의 발전 속도 같은 것들을 보고 앞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전기·수소차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전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수요를 초과하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집행이 되지 않는 만큼 필요한 곳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기반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는 아마 차들이 신차도 많이 출시되고 또 여러 가지 제조업, 제조사에서 가격을 많이 인하하기 때문에 인하를 많이 하는 만큼 또 보조금에 더 차등을 준다든지 해서 수요와 전망을 잘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큰 틀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5년 정도 미래 전망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급 대수 목표는 정해져 있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달성에 좀 무리가 있다 싶을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되어서 소요 재원 대비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수소차 수요 둔화 관련된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무공해차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계획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캐즘은 이제 있는 상황이고 캐즘은 또 한편은 극복되어야 될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신규 등록된 차들 중에 최근에는 전기차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요 관리도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최근에 늘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언제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20년에는 전체 신규 차량등록 대수 중에 전기차 비중이 2%대 후반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지금 8% 넘어서 10%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

○최은석 위원 24년 들어서도 그 추이가 계속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24년 7월 달 기준으로 볼 때 8.5% 정도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산업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준비되면 예결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은석 위원 전력기금 관련되어서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20년에는 한 4조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가 최근에 에너지특별회계하고 또 기후대응기금에 22년부터 지금 한 1조 5000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실은 전력기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지금 3.7%에서 2.7%로 단계적 인하도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력기금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특별회계나 기후대응기금에 지원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 전력기금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이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님 의견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초기에 이 전력기금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이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좀 낮은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 가지고 향후에 재정효율성을 좀 높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탄소 전원의 균형 있는 보급을 위해서 이 사업 전반적인 체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예를 들면 한전공대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실은 전력기금의 본래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지금 전기사업법상에 보면 그게 개정이 되면서 전력사업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전력기금의 용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규정상 어긋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 전기세에 대한 인상 압력이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기료 인상과 관련돼서 이 전력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또 결국 준조세 성격이라 그동안 폐지 같은 것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7에서 2.7%로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전력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내년에 2.7%까지는 낮추겠지만 지금 전력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생각이구요. 또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면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균형 있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실은 전기료를 인상하려면 전력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낮추든지 폐지하는 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전력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과 향후의 정책 방향 같은 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최은석 위원 그 전에 감사원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혹시 감사 끝나셨나요?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은석 위원 장관님, 끝났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예.

장관님, 지금 고용보험기금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은데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제도개선을 거의 다……

○최은석 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수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자들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정 수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는 안덕근 산업부장관님한테 질문드릴 거니까요, 다른 분들은 좀 쉬셔도 됩니다. 잠깐 나가셔도 되고 차 한잔 드시고 와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하려고 계약을 맺었거나 MOU를 체결했거나 또는 계획된 나라가 어디어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체크 하나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체크. 그리고 UAE도 우선협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끝났습니다.

○신영대 위원 끝났지요. 지금 공사 시작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UAE는 4기가 다 끝났습니다.

○신영대 위원 끝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나라도 있지요,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획된 나라는 아직 없고요.

○신영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원전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데들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원전을 도입하는 이유요?

○신영대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경제성이 있고 안정성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원전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어제 우리나라를 다녀간 불가리아라든가……

○신영대 위원 짧게 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 갔다가 지금 원전의 비중을 60%까지……

○신영대 위원 지금 체코를 예로 들면 체코가 재생에너지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원전으로 가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의 비중이 한 50%,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신영대 위원 예를 들면, 체코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한 삼사십 %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니, 한 75% 정도 됩니다, 체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 그렇습니까?

○신영대 위원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신영대 위원 21.6%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우리나라가 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한 20%……

○신영대 위원 20%요? 그렇게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5~20% 정도 됩니다.

○신영대 위원 아닙니다. 그건 잘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신영대 위원 발전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발전 비중으로 말씀……

○신영대 위원 발전 비중이 한 8%, 9%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발전 비중으로 하면 훨씬 더 낮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폴란드도 원전을 도입하는데, 지금 폴란드 석탄 발전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현재 2022년 기준 70.43%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체코가 석탄 발전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2022년 기준 44.15%입니다. 제가 폴란드를 갔다 왔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원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원전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 높일 거다.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을 해 갖고는 서부 유럽 쪽으로 수출을 못 한다. 독일 수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RE100 때문에. 그래서 기저 전원의 개념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원자력을 도입하는 거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나라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같이 키워 나가고 있고……

○신영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요 안 올라갑니다, 발전 비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UAE, 사우디 앞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에너지전략,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거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UAE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여기는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4%, 원자력 6%, 합쳐서 청정에너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중 5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이걸 왜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글로벌하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글로벌 대세고 모든 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결국 뭐냐 하면 국제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저는 탈(脫), 탈원전을 너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전 해야 되지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이 부족한데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역할이 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수출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

시나 이것 때문에 원전을,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원전을 고민하시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말이지요 원전은 확대해 가는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지금 시작해도 윤석열 정부 내에 안 끝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특히나 UAE나 사우디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요 200조가 넘습니다. 이번에 체코에서 24조 원 투자했다고 우리 굉장히 좋아했는데,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각각 나라가 200조 넘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화큐셀 같은 좋은 기업 있잖아요. 다른,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세계시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원자력과 함께. 함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잘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원원하는 솔루션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것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작년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지적 나왔던 것 알지요?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얘기할 거다, 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것 오래된 이슈입니다.

○신영대 위원 오래된 이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체코 원전 수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뭔가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시겠지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문제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소송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원원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니, 대통령 말씀 중에 '100% 우리 기술로, 이거 우리 거다.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기술력으로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결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함께 경쟁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된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결국은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 생기니까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에 체코에서 저희 한수원이 개발한 우리의 노형인 APR1000이라고 하는 원자로 노형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 기술 역시도 우리는 한국 독자형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아니다, 이 기저에 자기 기술이 있다, 포함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영대 위원 그래서 전에 폴란드, 바라카 원전 그때 어떻게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사가 협의를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같이 진출을 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때 우리가 계약한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 180억 불쯤 되는……

○신영대 위원 180억 불쯤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80억 불 중에 설비 부분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금액이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넘겨준 게 아니라……

○신영대 위원 납품을 받은 거지요, 웨스팅하우스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 금액이 전체가 한 2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20억 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체코 원전 수주할 때 그 준비 안 하신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신영대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협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체결되게 돼 있고요. 지금부터는 발주처하고 한수원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독자 기술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산업부에다가 말씀드려서 답변을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산권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UAE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할 여지도 있음.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바라카 원전과 똑같은 사례로 일부분의 설비 부분 자재의 납품권을 웨스팅하우스한테 던져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와 설비가 들어갈지는 한수원이 발주처하고 계약을 협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완전히 100% 우리 기술로 들어갈 거고 우리 기업들만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장을 하나를 지어 봐도 거기에 중요한 부품들이 해외에 있는 부품이나 설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설비가 완전히 우리 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두산스코다파워와 같은 현지에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도 활용을 할 계획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우리가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니냐. 그러면 수주한 다음에 협상 들어가고, 수주한 다음에 협상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원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양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양국의 산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협력하는 모델은 기업들이 나중에……

○**신영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보십시오.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출 시장에서 외국을 이기기 쉽지 않다, 맞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반드시 기술력을 통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을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원전도 수출하시고 재생에너지도 지원해서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생 비중도 높여 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
○**위원장 박정**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연 3일째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FTA 이행지원기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요. 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그러니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희망 농가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혹시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작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많은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돼 있는 전체 총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임미애 위원 아직 지원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품목이 한우, 한우송아지, 육우, 낙두, 이렇게 4개 품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FTA 체결이 된 나라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지원이 되는 거라면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신청을 기반으로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웠는데 신청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이 정보에 대한 공유가 모든 농가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교육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한테 똑같은 여건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는가,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놓치는 농가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번식우 농가의 경우는 FTA 피해지원금이 나가는데 신청했느냐 그랬더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나와 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신뢰를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 기금이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에는 딱 한 품목, 귀리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헥타르당 73만 9000원, 약 7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때 대상 농가는 203농가입니다. 면적은 833ha예요. 전체 예산이 6억 1500만 원, 6억 한 16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지요.

22년도는 아예 해당 품목이 없고요. 그런데 저것은 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 시세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적정해지

고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릴 수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생강 하나가 품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헥타르당 지급 단가가 31만 6680 원이에요. 농가는 907농가, 면적은 356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요.

계산을 해 보면 귀리의 경우는 농가당 302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생강의 경우는 농가 당 12만 원이에요. 저것을 제가 평당 계산하니까 생강은 평당 105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하려고 나서면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지원 대상 품목 신청서, 지불금 지급 신청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 내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관내 생산지 현지조사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농가가 신청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 일정한 금액이 된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해도 지원 되는 금액이 농가당 12만 원 정도라면 실제로 이것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협정 발효일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 소를 키웠는지 내지는 언제부터 내가 귀리를 농사지었는지, 이 나라하고는 협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농가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인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될까 해서 지금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원래 기준이 되어 있던 수입량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그 해당 품목의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충족될 가능성은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지금 24년 것이 확정은 아닌데요. 24년은 저 액수 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21년 이전에, 20년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들쭉날쭉한 편이고요.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들쭉날쭉한 건 농산물의 특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집행 기준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곡물 시세도 오르고요 하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후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사실 꽤 많이 상승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에서 사실은 수입 농산물이 과거처럼 굉장히 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서 10% 이상 떨어져야만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해당 농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FTA 이행지원기금이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준을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국내 농산물의 경우는 생산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만 하면 국내 농산물이 생산비를 충분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가격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서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혹시 이번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조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점검을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이 표가 굉장히 예외적인 3개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지원받은 농가가 상당히 많았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정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런 사례가 저는 더 많이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은 점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기금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돈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비와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1년, 22년, 23년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교육비는 3년간 총 19억이 집행되었고요 홍보비는 전체 64억, 다시 말하면 교육비와 홍보비를 합치면 83억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농가당 지원된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사에 집행되는 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3개의 언론사하고 비교했을 때 3개의 언론사가 가져간 돈이 65%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전문지도 아닌 3개, 소위 조선 중앙 동아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가져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사를 쓰고서 가져갔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쟁력 있는 농가 사례 홍보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돈이 64억이에요. 이러니 이 기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게 기사화된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 언론사, 좀 액수가 많은 언론사의 경우는 영상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로서가 아니라 영상물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를 저희가 어떻게 배정을 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권역별로 품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정례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3개의 언론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농가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언론사의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이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것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 가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정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비와 홍보비에 칸막이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저 교육·홍보비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정 임미애 위원님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다는지 아니면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서민들인데 그중에 소상공인……

○서범수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분들이 전체 기업 숫자로 보면 한 99% 정도 차지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전체 근로자로 보면 한 81% 정도. 이분들을 다독거리고 이분들의 어떤 행복을 찾아 주는 게 우리 경제팀들의 역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채도 많았고 그리고 생산비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7월 3일입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서범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중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여기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거기 계십니까.

이게 지금 항목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전체 과제 수가 24개 정도로……

○서범수 위원 55개 정도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55개……

○서범수 위원 55개 중에 중기부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24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서범수 위원 28개 정도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7월 3일 날 정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브리핑도 하고 언론에 노출을 시켰는데 과연 이게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체감이 될까, 체감을 하고 계실까.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7월 3일 날 한 번 ‘종합대책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물론 후속조치도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체감하는 부분들이 없다, 좀 적다. 지역에 가면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좀 도움을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늘상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 하나만 덜렁 발표할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이걸 해당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지금 사실 저희가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적으로 관련돼 있는 아이템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상환 연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게 나갈 때마다 별도로 저희가 전화도 다 돌리고 하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사실 모르는 대책은 없는 대책과 마찬가지로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현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장관님은 지금 너무나 공급자 위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자들 내지는 수요자들이 오케이할 때까지, 오케이가 돼야지. 소비자는 아닌데 주무부처에서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했습니다’라고만 판단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것을 내고 난,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28개 과제가 들어 있고 하나 하나 과제가 나오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시점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결된 대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범부처가 챙겨 나가도록 또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한 부분, 정책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홍보가 거의 한 50%쯤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모르는 정책은 없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가지고 하나 하나에 대해서 뭔가 더 자영업자·소상공인들한테 정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제일 비난을 많이 받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지역별 그린벨트 관련해서 전략사업 국토부에서 받았지요, 지자체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33건이지요, 33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33건입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5월 달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 7 8, 언제 마감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날짜를 꼭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심의하고 선정하는 절차는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때 그린벨트 관련해서 확 풀겠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풀어 보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전면 개편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관련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연말까지, 정부가 일하는 게 대통령 말씀하신 그다음 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범수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데, 국토부가 너무 안 움직인다. 싫어하는 것

아니냐, 국토부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하면 내 밥그릇 떨어질 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억지춘향 격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방의 그린벨트를 1·2등급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손댄 적 없거든요. 2월 달 대통령 발표 요지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1·2등급지라 하더라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서범수 위원 장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1·2급지, 1·2급지도 완화시키겠다. 대신에 그린벨트 1만㎡ 1·2급지를 풀면 신규로 대체지 지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신규 대체지 어디에 지정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국유지 쪽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범수 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국토부에 내놓고 신규 대체지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지금 국토부는 아예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신규, 장관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등급 1·2급지도 손을 댈 수 있겠다, 대신에 그만큼의 신규 대체지를 새로 지정을 해라. 지금 어디에 가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한단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대상 후보지가 있습니다. 있고, 쟁점이 있는데 국유지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로 하는 건 좋은데 국유지가 나름대로 뭔가 또 체육시설로 쓰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린벨트 되면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고쳐서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더라도 지금 국유지 상태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쓰게 해 준다는지, 외에 또 다른 장치들도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지 어디로 지정할까요?’ 하면 국토부에서 대답을 못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게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국토부가 하시든지 총리실에서 하시든지 간에 뭔가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주로 산림청이 국유지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서로 협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되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규 대체지로 지정을 하도록 협조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라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먼저 홍보를 하면 국민들이 먼저 또 기대……

○서범수 위원 아니, 벌써 대통령께서는 그린벨트 확실히 확일적으로 개편하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개발을……

○서범수 위원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희망고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서범수 위원 진짜 희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진행은 잘하고 있고요, 진행은 잘하고 있고……

이것은 선부른 단계에서 홍보를 할 사항이 아니고 결론을 내고 확실한 모양을 보여 주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 그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려지면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제발 희망고문 좀 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윤종오 위원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인구구조나 경제변수 등을 고려해서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윤종오 위원 이렇게 이 장치를 도입하면 장래에 연금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에 매년 물가상승분만큼의 인상액의 폭을 줄여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좀 늘리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윤종오 위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 기대수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 가입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연금 더 주려고 안정장치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동안정화장치가 아니라 자동삭감장치다 이렇게 결론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 54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평균 수급액이 한 6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수급자의 70% 가까이가 사실 6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 또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도 월평균 수급액이 한 108만 원 정도 수준, 높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금까지 깎인다면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기댈 데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저희가 오늘 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수급인구가 한 700만 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27년까지 올리겠다는 것도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자동화 안정장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자동조정장치……

○윤종오 위원 여기 지금…… 조정장치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는 그렇게 말을 씁니다.

○윤종오 위원 안정화장치라고 저는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여기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조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윤종오 위원 오늘 예결위 자리지만 김문수 장관님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윤종오 위원 장관님께서 워낙 실언·망언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신념에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발언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어디 뭐가 변함없냐고요?

○윤종오 위원 아니, 그 당시 식민지 시대에 국적이 일본이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식민지 시대에는……

○윤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식민지 시절……

○윤종오 위원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주장 그대로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그대로입니다.

○윤종오 위원 예.

그러면 일제강점이 일제의 강압에 의한 불법적인 국권 침탈이었다, 이걸 인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건 한일협약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면서 국적은 일본이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해 가지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지요. 누구나 불법인 걸 다 알지 않습니

까? 그런데 신체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신체를 아무렇게나 훼손해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것 안 되지요.

○윤종오 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윤종오 위원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발언이 얼마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주장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자꾸 일본의 주장과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또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의 교과서가 무려 18개 중에서 15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같은 그런 발언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전혀 잘못된 인식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윤종오 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일본이 억지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역사 인식을 이렇게 거부하고 일본의 입장에서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정말로 참담함이 그지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것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저는 이렇게 주장할 테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윤종오 위원 아니, 본인 주장 하세요.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된 게 아니고……

○윤종오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발언시간이 같이 이렇게 저한테 대해서……

○윤종오 위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지요. 저한테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윤종오 위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저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요.

○윤종오 위원 답변시간 안 드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면 안 되지요. 위원은 고함을 지르고 저는 못 지릅니까? 왜 고함을 지르세요!

○윤종오 위원 발언을 계속 방해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무슨 발언을 방해합니까? 저에 대해서 인신모독, 왜곡 이것은 중단하십시오.

○위원장 박정 질의 계속하시지요.

○윤종오 위원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손기정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 조용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왜 고함을 지르세요?

○위원장 박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윤종오 위원 아니, 발언을 하는데 왜 계속 끼어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질문을 하지 고함을 왜 지르세요. 위원님, 질문을 하시지 왜 고함을 지르세요?

○윤종오 위원 왜 자꾸 끼어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지금 질문, 위원님……

○위원장 박정 김문수 장관님!

○윤종오 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지금 위원님이 저를 뭐 어디, 그렇게 폭언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질문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고함을 지르는 것은 폭언입니다. 그것은 폭행이에요.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윤종오 위원 아니, 위원이 발언하는데 끼어드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정 아니, 윤종오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위원이라도…… 위원이 폭언·폭행 이거 안 돼요.

○윤종오 위원 제가 먼저 폭언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폭언이지요, 그거는.

○윤종오 위원 제가 먼저 폭행을 했습니까? 왜 끼어들어요, 그렇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폭언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정 발언시간 그냥 쓰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무리 위원이지만 질문을 하셔야지 폭언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리고 사실 왜곡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정 김문수 장관님, 제가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지금 본인이 폭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이 판단하시는데요. 일단은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는 중간에 마이크를 사용해서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 고함지르는 것도 위원장님 막아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폭언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자꾸 끼어드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아니, 저에 대한 사실 왜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사실 왜곡을 뭘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사실 왜곡…… 지금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박정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한 개도 한 개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 질의 시작하실 거지요?

○윤종오 위원 본인이 주장했던 것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서 자꾸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격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격앙을 해야지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격앙을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격앙을 하면 폭언을 듣는 제가 격앙을 해야지요.

○윤종오 위원 참 기가 찬데……

○위원장 박정 제가 환노위도 하고 여러 번, 인사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같은 패턴이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 말씀이나 또 국무위원들 말씀을 참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도 장관님께서 위원의 질문에 그냥 답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본인의 신념이 있으시면 신념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간에 말을, 언성을 높이시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에 의해서, 위원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존중한다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여튼 장관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당시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면 우리 독립투사들은 자국 법을 어긴 범죄자고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자국의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쳐 일한 노동자가 됩니다. 일본 국민이었는데 강제징용이 되었다 이걸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24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장관, 차관 또 독립기념관장, 인권위원장 이런 국가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현재의 역사적 입장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속칭 한일합방조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전 대한민국의 입장과 변함없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다 이렇게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광복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님은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여기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원장님은 오늘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어떤 정부 입장, 아까……

○윤종오 위원 좀 전에 외교부 입장과 광복회에서 물었던 입장,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감사원장 최재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윤종오 위원 여기 있는 국무위원 중에서 외교부의 입장, 국무총리께서 계속했던 입장을 달리하시는, 여기 계신 장관님이나 국무위원이나 다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제발 좀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스스로 밝힌 역사 인식과 노동 인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 우익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분이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근간을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 저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가뜰이나 어려운 윤석열 정부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원장님,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과기부장관님과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환경부장관님한테만, 세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과기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R&D 예산이 작년에 줄었다, 올해 늘었다 이래 가지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도 R&D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10%대의 성장률을 가지고서 한 10년 정도 왔던 R&D 예산이 한 번 정도의 숨을 고르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대통령의 격노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랜 검토와 이런 과정 속에서 R&D 예산의 축소가 전년도에 일어났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는 하나의 개혁 과정의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돈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액수의 증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돈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처별로 운영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이지바로(Ezbaro)하고 RCMS 이렇게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혼선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아마 연구자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입니다. RCMS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넣어 놓고 내가 연구비를 쓰면 자동으로 돈이 쪽쪽쪽 빠져나갑니다. 이지바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넣어 놓고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두 시스템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 문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혼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범정부 통합연구시스템으로 포함해서 단일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신규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과제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신규 과제는 좀 뒤로 제쳐 두더라도 계속과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오는데 3월, 4월이 돼야 돈이 나옵니다. 물론 R&D 사업의 어떤 절차나 제도로 인해서 기재부에서는 사실 1월 15일이나 이쯤 되면 돈이 배정이 되는데 부처하고 평가기관, 연구관리기관 그다음에 연구자……

이게 작년에 자기가 5개년 계획으로 연구하기로 돼 있는데, 1차 연도 교육 연구하고 2차 연도가 됐는데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4월 이렇게 돼야 받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또 상당 부분, 한 달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특히 기재부에서 예산집행 강조할 때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 70%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한테 그 프로세스를 이행 과정에 있는 돈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이것을 못 주도록 지금 과기부에서 어떻게 보면 막아 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선급금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과학기술인공제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연구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가지고 30%면 30%를 먼저 받아서 1월부터면

1월, 우리 예산 배정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 도입을,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실제로 대학에서는 미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지 않은 데는 연구비 사용이 몇 달 지체되고 그러니까 혼돈을 주는데 연구비 이월이 혁신법에 의하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상위 법이. 그래서 기재부 등과 유관 부처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제는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도 개선돼 가지고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이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년주의 예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서도 뭐고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단년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R&D가 한 5년이다 그러면 평가단위 자체를 끊어 가지고 2~3년 해서 직접비까지 다 이월할 수 있게 예산집행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에, 연구자의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월해서 내년도에 돈을 쓰겠다라는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단년도 예산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집행을 내라, 왜 집행 안 했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연구자들한테는, 과기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쥐 놓고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 과기부 문제가 됩니까라는 이게 관리기관에서 연구자한테 가는 돈이 실집행이나, 연구자의 직접 연구에 소요되는 돈이 실집행이나를 가지고 실집행, 실집행,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연구자도 힘들고 연구관리기관도 사실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딱 끊어 가지고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하고 예산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나 감사하는 이런 기관들까지 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구요. 대학에서도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개선이 안 되다가 근래 개선이 된 부분인데 아직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조승환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름은 도시재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간 한 10조 원씩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총 한 600곳 정도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120곳 정도를 종료를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쪽이 반, 효과가 없거나 적은 쪽이 반 그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보입니다.

○조승환 위원 저희 지역구 이야기, 제가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해 놨는가 해서 가 봤더니만 건물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 사랑방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도 대동전수 방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총액 460억이 투입됐는데 유동인구는 -15.7%, 매출액은 21.1%, 일자리는 2.3%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걸 관리하는 민간조직들의 인건비, 일자리 밖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원도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지구 사업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혁신지구 사업이라든지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 다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 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동체를 강조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지원이 많이 간다든지 하는 약간 전시성으로 좀 흐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에, 금년 봄에 저희가……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지구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걸 새로 론칭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그 지역의 기본 인프라,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건물 소유주들이 건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범지구를 금년 중에 한 30곳 정도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금주 위원 최근 국민 주식 쌀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오늘도 경북 상주 지역의 수확기 앞둔 논을 갈아엎었던데 심정이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타깝지요.

○문금주 위원 요즘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농가가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후에 23년도산 쌀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발표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고요, 위원님. 23년 4월에 민·당·정협의회 하면서 의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아니었고요.

○문금주 위원 그 의지 표현이, 국민들은 다 약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단어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서는 수확기라고 또 그러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수확기의 쌀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때 23년도 10월 반짝 21만 7000원 정도를 기록하다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17만 6000원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장관님, 어떠세요? 지금 말씀은 수확기 때 20만 원 이상 유지하는 걸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그걸로 책임을 다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가격이 얼마다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아요, 그것은 수급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계속 시장가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3년산 쌀에 대해서 작년에 11월 그리고 올해 2월 10만t을……

○문금주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말을 살짝 다른 걸로 돌려서, 우리 당초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어떻게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만 6000ha였습시다, 올해.

○문금주 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만ha 정도 감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뭐랄까 기대감, 쌀 재배가 상대적으로 영농 편의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전락작물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월 21일 발표를 하셨잖아요, 45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 45만t은 24년 정부 비축 계획이었고요. 공공비

축 계획이었고요 6월 21일은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5만t을 추가 매입을 한다 그리고 농협이……

○문금주 위원 그래요. 5만t 추가 매입한다 그리고 민·당·정 나중예, 국무회의 발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8월 21일인 걸로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국무회의에서는 24년 공공비축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때 얼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45만t 말씀드렸고요. 6월 21일에, 저희가 5만t을 매입을 하는데 23년산 쌀을 매입하는 것이고 그것은 24년 공공비축 매입 계획의 일부 쌀이다라는 것을 6월 21일에 발표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45만t 매입 계획에 구곡 5만t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일단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금년도 수확기 수급 대책 발표를 한 달 당겨서 하시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원래는 10월 중순쯤 했는데요.

○문금주 위원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목표 말씀이신지……

○문금주 위원 쌀값.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격을 목표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문금주 위원 수확기 최소 20만 원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급을 맞추는 것이고요.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의지 표명까지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께서……

○문금주 위원 수확기에 20만 원 이상은 유지를 하시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수급을 맞추는 것이 가격을, 말하자면……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러면 수급 좀 맞춰 주시지 왜 안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곧 할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최소 26만 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부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어찌 됐든 수확기 20만 원 플러스알파는 유지를 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약속도 아니라 그러면 의지 표명을 하셨다 그러면 이번 수급 대책 발표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말씀하신 수급 조절을 잘하셔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격을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수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123조 4항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거기에는 노력이 아니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한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력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좀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을 하지요.

농림부장관님께서 그 정도도 약속을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너무 쌀 중심으로 계속 이런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대체작물 정부에서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전락작물……

○문금주 위원 직불제도 주고 있고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저도 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45만t 발표한 것에 보면 어찌 됐든 23년산 구곡이 5만t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발표할 때 구곡은 그동안 포함이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구곡을 포함시킨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공공비축 매입 계획이요 24년 공공비축 매입 계획인데 그게 말하자면 24년 안에 그 공공비축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지, 회계연도 기준인 것이지 24년산 쌀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계획이 아닙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양곡관리법을 한번 봤어요. 2005년에 정부입법으로 개정이었었는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우리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비축제의 기본개념을 양곡연도 말 기준 목표로 설정하고 비축물량은 시장가격, 즉 수확기의 지역별 산지 가격으로 매입한 물량으로 충당하여 보관한다’ 이런 양곡관리법의 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곡을 그동안 안 하고 신곡으로 계속 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구곡이 포함이 돼서 어찌 됐든 신곡 5만t이 24년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농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명확히는 23년산 쌀이나 24년산 쌀이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금년 수확기가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대책……

○문금주 위원 거기에 좀 반영이 제대로 되고, 지금 어찌 됐든 또 대풍이 예상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지금 수확기 20만 원 선이 유지된다는, 나는 정말 농림부장관님께서 직을 걸고서라도 좀 약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시장에 뭔가 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고,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전혀 안 가는 겁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장님,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심심하실까 봐 제가……

사천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셨는데 좀 적응은 되셨는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지금 개청한 지 100일 이틀 지났습니다.

○**문금주 위원**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기대가 많은데요.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가 보셨던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다녀왔습니다.

○**문금주 위원** 가신 그 길이 어떻던가요? 접근로, 진입로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사천에서 여수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고흥 나로우주센터 가는 데는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셨지요?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고흥에서는 아마 2차선을, 차선을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고흥이나 전라남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나로까지 33.45km가 되거든요, 고흥읍에서 봉래까지인데. 그게 국도 15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4차선 확장하려고 해도 645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항공청에서 좀 언덕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안덕근 산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체코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성곤 위원**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짓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성곤 위원** 우리나라의 최초 원전 수출은 UAE에 수출한 게 최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바라카 원전 수출입니다.

○**위성곤 위원** 바라카 원전 수출인데, 그 당시 2009년 12월 27일에 계약을 맺고 21조 원의 계약을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1·2·3호기는 각각 준공을 했고 100% 출력 운영 중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4호기는 이번 달에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정산 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조만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의 총괄자는 한전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전이 주계약자고 한수원이 공동사업관리자로 있고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은 제대로 정산 받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계신 사실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개별 기업들이,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계약관계나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듣고 있는 정도고 영업기밀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주계약자가 한전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전에 포함되어진, 그러니까 한전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발주처로부터 추가 역무를 받거나 아니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는 사유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09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년, 15년씩 끌고 가는 사업들은 중간에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공기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맺고 있는데, CCR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변경계약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많은 플랜트 수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 사안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협상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성곤 위원 그동안 한전이 CCR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또는 공기에 따라서 변경계약들을 맺고 진행해 왔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3개, 3호기까지는 잘 준공이 돼 있고 4호기도 조만간에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많은 그런 컨트랙트 체인지 리퀘스트(Contract Change Request)가 있었을 것이고 조율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전에 물어봤어요. 한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전에서는 계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몇 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2009년에 실시해서 2010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2010년에 변경 사유를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발생하면 변경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실제 한전은 UAE와 그러지 못해 왔다, 답변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전을 통해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15년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된 변경계약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은 한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21조에서 수익 부분이 한 10%라고 보면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일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과 한수원을 비롯한 한전, 한수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어떻게 종료가 돼 있는지는 저희 정부에서는 알기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플랜트 수출을 저희가 해 보면 그런 중간에 건설 시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국제 자재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계약변경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변경을 이루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인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매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보정조치를 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상황에 따라……

○**위성곤 위원** 또한 발주처가 요구한 것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새롭게 계약변경을 하고 이를 시행을 하지요.

제가 장관께 드리는 말씀은 15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고 만약에 영업기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한전이 직접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영업기밀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걸 빚으로 떠안게 된다면 한전의 전력요금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권역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시겠지만 제주도민들은 종종 치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나들이를 해야 됩니다, 본인만 나들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호자까지. 그래서 지난 2022년인 경우 약 2400억 원대 의료 역외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제 보호자들의 이동 경비까지 그다음에 체류비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역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원래 제주도 인구가 67만이고 지난해 8월 초에 제주도 외 관광객이 한 830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연 한 1300만~1500만 정도가 제주를 찾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내가 아팠을 때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자유도시에서 이런 의료를 제공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종합병원과 관련된 말씀인데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때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하려면 진료권역이 중요한데 적절한 진료권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용역을 연말까지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에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 지금 상급병원 지정은, 제주는 서울권역에 묶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년도부터 묶여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9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급병원 지정하면서부터 제주에 묶였는데요, 그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요. 교류도 적었을 거고요.

○**위성곤 위원** 30만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70만입니다. 지금 상급병원 지정 기준이 10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인 경우는 70만이에요, 제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주권역으로 병원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상황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면 실제 상급병원 지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진 법안을 이번 에 제출을 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최소 한 곳의 상급병원을 지정하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만들려면 서울대학교 밑에 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래서 저희가.....

○**위성곤 위원** 서울대학교가 제주도를 커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제주에 상급병원 지정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니 좀 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하고 계신데 용역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논리들도 녹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00만 명이라는 규정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급병원 지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일째 지금 예결위 질의에 며칠간 계속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무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 도시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도시가 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AI·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발전할 기회이자 또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이 다시 우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최형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결산에서 보면 과기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막대한 적자, 그것이 또 공자기금에 2조 8000억의 빚을 지고 지난, 올해 한 해 이자만 660억 원을 지출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지 적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게 코로나 사태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나간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주로 보면 여기에 2020~2022년, 3년간 1조 3000억 원의 재정을 쏟아부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모두 2조 5000억을 쏟아부게 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AI·디지털 도약 경제에 아주 귀중한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목적으로 한다고 그린뉴딜이라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2020년 지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거덜 내면서 우체국보험적립금까지 차입해서 그 역시도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바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굉장히 많은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만 되었다면…… 우리 AI 산업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기초겠지요.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AI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홍보하고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아 놓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2021년까지 72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360종의 데이터 중 168종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122종은 계획대로 구축되거나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168종의 데이터 품질 보완 기간을 준수한 경우 3종, 1.8%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가보다는 그냥 공자기금 같은 것…… 기금을 그냥 누구한테 나눠 주기 위해서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서 관리가 부실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한 업체는 관계자 3명이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정부 돈을 완전히 무슨 도둑질하듯이, 쉽게 쉽게 아주 도둑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쌓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메우기 위해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차입해서

재정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연쇄작용으로 차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품질의 데이터 하나 뽑아내지 못한다면 AI 패권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국가재정은 국가재정대로 거덜 내고 또 더구나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업 기간 동안 품질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수행 업체를 선별해서 추후 사업에 참여 제한을 뒤편 되고 부실한 사업 관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업 관련자에게는 주의조치뿐 아니라 고발이라든가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제가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에 산중위를 해 가지고 참 걱정이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저 PT 봐 주시겠습니까?

걱정이 전력망입니다. 이 전력망,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이 전력망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AI·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일렉트리피케이션(electrification), 막대한 전기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문제는 보면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10년간 발전량은 55% 늘어났습니다. 전력망은 단 9%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다 뭐다 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는 지금 지방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수도권에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송배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두고 다음에 전력설비,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늘려 놓고 그것을 수도권으로 송배전할 방법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급 불일치와…… 지금 송배전망 설치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또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정부로서는 AI·디지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막대한…… 우리가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데, 뭔가 인센티브도 줄 수가 없고 전기마저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AI·디지털 혁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각국에서 송전력망 구축이 지연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의 사례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산업부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다행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국가 전력망 구축하는 데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꼭 빠르게 전력망법 통과시켜서 주민 수용성 높이고 인허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 가지고 국가 기간망 확충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장관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벤처부장관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가에 가 보면 정말 고통스럽다는, 참 힘들다는 아우성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저 있는 지역구에서는 엇그제 우리 예결위를 하는 상황 중에 또 화재까지 발생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엇친 데 덮친 격이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즉 발행해 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최형두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산중위 때 중기벤처위를 하면서 국정감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 정말 그야말로 온누리에 두루두루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는 데 반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발행해서 그 지역에서 쓰게 돼 있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과 매칭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비교적 여력이 있는 시도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또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정한 지역이 산업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를까 모든 나라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면 그건 발행 비용의 문제 그리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경우에도 보면 이게 발행을 하려고 목표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행액은 그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에만 한정해서 사용되다 보니 발행 목표를 채우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는 예년 동기보다 굉장히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나 또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을 보너스처럼 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서울에 있는 공직자라든가 대기업에 다니는 자녀들은 전통시장에 갈 시간이 좀 없기도 하니까 명절 때 고향의 부모 형제들에게 줍니다. 저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 형제들이 전통시장에서 쓰고 그야말로 수도권과 지역에, 수도권에서 일하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지역에 사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정말 그 상품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눠 주어서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행 목표에 비해서 실

제 발행액이 좀 못 미치고 있는 이유를 잘 분석해서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도 넓히시고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름에 빠진 지역경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올해 사용 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40개 정도 못 들어온 사업 영역들을 전부 다 없애고요 한 28개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지역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본청 앞에 기후위기 시계를 이전해서 설치했습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더위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요? 정말 기록적으로도 서울의 경우에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후가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지혜 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충격으로 물가의 10% 정도가 올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에 1년 후 전체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등 비근원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0.7% 증가한다는 연구를 최근에 한국은행이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2.6%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신선식품지수도 7.7% 증가했고 농축수산물도 5.5%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물가 증가보다 농축수산물 물가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농작물의 가격 상승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염 등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민들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산자 측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지혜 위원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재해보험제도가 이러한 위험 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신청 63만 건이 됐는데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 21.1%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수확량 기준이나 손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장 수준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일례로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수준이 시가의 60~100%인 데 반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금액의 60~9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증가하는데 보험을 가입해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해 농사를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가입 범위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재해보험에 포함되는 작물의 숫자, 범위도 굉장히 확대를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 항목에 넣는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봤습니다.

○박지혜 위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민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부담 규모가 1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의 운영 원칙이 있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부분보다는 피해 보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앞서 기후플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좀 높은 것 같다, 변동성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굉장히 큰 질문이기는 하고 몇 번 답변을 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물가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근원물가지수, 이번 8월 달 CPI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근원물가지수는 그동안 좀 안정적이었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근원보다 높았거든요.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그게 그중에 에너지 가격도 있고 농산물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박지혜 위원 지수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여쭙려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 가격 관리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마 공공비축량을 확대한다든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해 오신 게 아닌가 싶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좀 단기적인 대책이었는데 그런 단기적인 대책에다가 지금 농식품부장관님한테 물어보신 것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아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해 예방시설 확충이라든지 스마트 과수원 단지 조성이라든지 하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대책에다가,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게 기후변화랑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하는 부분들 이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단기적인 물가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조금 근본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농산물의 생산·유통, 수급 관리 전반적인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기재부장관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고요. 저 역시 기후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영농형 태양광같이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안정적으로 농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올해 4월에 영농형 태양광 추진전략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날 농업활동에 사실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지혜 위원 ‘농슬라’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렇고요.

그래서 농촌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농업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부장관님 옆에 계시지만 말하자면 전력계통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다음에 또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작물에 따라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작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자기 논밭이 아닌데……

○박지혜 위원 영농형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 여쭙았다기보다는 태양광 시설이 오늘날 농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쭙 것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법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를 이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 태양광 패널이다라고 하면 설치가 허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농사활동만 할 수 있는데 사실 농사활동에 쓰이는 전기를 생산하고 싶다, 조합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농사로만 한정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가 법인……

○박지혜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도 예전에는 제조활동만 할 수 있었지만 산단 태양광이라고 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 생산자들도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은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같이 사실 농지, 절대농지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법이 있고 법의 해석상 시행령의 개정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계통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소비지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의 태양광발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짧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건 말하자면 우량농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농지로 지정을 해 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이런 유의 시설들은 농지 위에 설치한다기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박지혜 위원 농지 안에 이미 있는 농업시설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농지와 갈등 관계가 적다고 볼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에 따라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작물들이 있어서 검토 중인 것이고요.

○박지혜 위원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 겠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은 저희가,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부터 유통

까지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들, 이미 과수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 종합적으로 원예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전략을 발표하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사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예산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아직 쟁점이 몇 가지 남아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조금 전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저도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늘 관심이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시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나 또 환경부 입장 그리고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분야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또 전기를 만들어 내야 되고 또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지보전이라든지 또 식량안보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는 큰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위기가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믹싱하는, 그러니까 융합의 시대기 때문에 한 분야를 너무 고집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특히나 우리 대체작물이나 전략작물로 넘어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시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런데 어떤 작물에 따라서는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수매가 문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하는, 너무 생산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산도 줄이면서 또한 전기농사로 농가 수입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전에는 이런 법들을 냈을 때, 또 이 농업진흥구역에 꼭 농토를 소유하고 계신 분만 농사짓는 게 아니고 대신 지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살펴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이용선 위원님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용선 위원 공항 소음피해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항공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거의 회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제 항공 수요가 회복됐다는 것은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소음이 다시 원상회복 또 체감도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의 피해 주민들 숫자가 대체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파악이……

○이용선 위원 소음대책지역이, 김해 김포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도심공항화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22만, 인근 지역이 53만, 한 7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지역에는 소음방지시설, 냉방기, 전기료 또 주민 지원사업들을 해서 소음 고통 속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 제도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까 박지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라 할 정도로 정말 더위가 심각하지요. 올해는 여름이 예측보다도 더 길어져서 127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 생애 중에 가장 선선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몇 달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1년에 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0만 원, TV수신료 3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4개월 지원하고, 대체로 보면 5월부터 9월까지의 사람들이 여름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학교나 또 상가나 가정에서도 그 시기는 더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료 지원 기간도 좀 늘려야 되겠고 대상도 학교와 주택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 가게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여기에 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재원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용선 위원 19년에는 728억 원 정도를 대책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는 항공 수요가 격감한 결과 대체로 4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국고예산 100억 정도를 지원해서 500억 안팎으로 최소 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 이제 항공 수요가 회복된 만큼, 이 재원이 주로 뭔지 아시지요? 이착륙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착륙료가 주 재원이고요 그다음에 소음부담금……

○이용선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착륙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척 쌉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의 김포공항을 1로 보면 영국은 6배, 중국 베이징은 5.6배, 일본은 3.4배, 싱가포르가 2.3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국제공항들을 보면 적게는 2.3배부터 6배까지 차이 나서 적어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지고 이착륙료를 한다면, 애초에 고시 주기가 시작되는 22년에는 800억 규모를 예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전기로 지원 문제까지 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검토해 주시고 지정 고시 주기도 현재 5년입니다만 그것도 온난화 등등의 진전 속도를 감안하면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용선 위원 그러시고.

기재부장관님, 목동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년 2월 26일, 후보 시절이지요. 목동 유세에서 목동선을 꼭 추진하겠다, 국민들께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세 때 양천에 와서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목동선은 아시다시피 명칭이 목동입니다만 사실 신월동입니다. 신월동 7개동에, 전철역이 없는 남부순환도로변의 아주 교통 소외지역 또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등등 피해지역이 집중된, 그래서 사실은 신월동의 교통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를 거쳐서 당산을 갑니다.

그런데 목동 신시가지가 14개 단지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최초의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려 40년이 되면서 이제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전진단도 통과됐고 6단지부터 본격적 사업 승인이 추진되고 있는데 같은 시점에 됐기 때문에 거의 삼사 년 내로 이 전체가 다 재개발·재건축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7000세대가 현재 5만 3000세대 정도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은 거의 20년 됐습니다. 2008년에는 민자가 들어와서 소위 중간에 사업성 이유로 해서 후퇴를 해서 한 번 좌절을 하고 그다음에 18년, 19년부터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 5년 추진하다가 3년간 예타를 점검하다가 지난 7월에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성 반영에 빠진 것이 목동 신시가지의 종합개발 시점이 좀 빠르다고 해서 아마 점수에 반영이 미진한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개발의 교통 대책으로 목동선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면 목동 신시가지의 5만 3000세대가 다 개발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빨리 목동선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타를 통해서 완성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의 개발 시점과도 거의 아마 시점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시의 오 시장과도 접촉을 해서 사업성을 보완해서 재추진하기로, 연내로 하여간 재추진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타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예타제도가 경제성과 정책성만 반영이 돼 있고 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접경지역이라든지 또 산촌 같은 이런 지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공항 주변의 특수한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을 통해서 좀 반영하든 아니면 균형발전의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든 예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는지 이런 점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다시 재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재설계를 하시는 게, 같이 노력을 해 보시지요.

○이용선 위원 서울시랑 같이 해서 다시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용선 위원 지난해 출산율이 0.7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용선 위원 지금 출산율 저하 속도는 정말 세계에서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타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핵심 과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정부도 인구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의료현장이나 각 곳에서 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하나 좀 점점을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6세 미만 소아의 소아과 진찰료입니다.

소아과 진찰받을 때 기본 진찰료에 플러스해서 소아 가산, 심야 가산이 붙는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심야 가산을 두 배로 인상한 것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선 위원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 소위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면 성인보다도, 성인이 한 6500원 정도 부담하는데 아주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아과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맞벌이 부부한테 부담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고 옳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 알아 가지고 개선 방안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험 재정에서 커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방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님께서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딥보이스피싱이나 AI 기술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정부의 사전·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지금 4/4분기에 저희들이 인공지능 대비실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된, 오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언제쯤 실시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4/4분기에 아마 실시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종합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보도자료가 2017년도에 정부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26일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형식도 유사합니다. 2020년 보도자료입니다. 이때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전국이 들쭉인 이후였습니다. 2020년이지요. ‘오늘 4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2017년의 보도자료는 대책이 주로 몰래카메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정부는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그 보고서 속에, 종합대책 속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당연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관계부처 종합회의가 있었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컨트롤타워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하는 보도자료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종합대책을 마련하실 때 진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범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예방과 방어와 피해에 대한 대책이 더 앞지를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런 노력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원장님께서 이에 따른 감사를 하실 때에도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에서는 대심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바로 제 지역구인 동래구 온천천 일대에 대한 대심도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온천천은 금정구부터 시작해서 금정구-동래구-연제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이 온천천 일대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중학생 때 태풍으로 인해서, 잠깐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갑자기 버스가 멈추고 모든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 현재의 동래경찰서 위치로, 집으로 찾아갔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사라지고 물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고 거의 저의 허리와, 처음에는 다리부터 시작했는데 허리와 거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을 압박하는 수준의 물이 차오르면 인간은 공포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만약 비가 더 내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이것은 보장되지도 않았고 대심도 같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온천천에서 사망한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런 폭우 때문에 사망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대심도 사업들은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완섭** 예,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35년 동안 그러한 기억을 가지는 다른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평생 온천천을 보면서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온천천 대심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2024년도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각에서도—지금 동래구 출신이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별히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종합질의를 쭉 하면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마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정부는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 갈등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실기하고 있었습니니다.

지난 8월 16일,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지영 위원** 그때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석회의 청문회를 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지영 위원** 그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니다.

잠깐 PPT 띄워 주시겠습니다.

당시의 속기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문회에서 조정훈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대화 채널을 국회가 이번에 한번 역할을 해 보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우리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의대생 대표와 전공의 대표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국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화 테이블에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참여하실 거지요?’

증인 장상윤, ‘예, 그렇습니니다’. 대통령실 수석이시지요.

증인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때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장관님도 동의하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간사인 조정훈 위원께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저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저희의 선의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모든 여야가 주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거의 다 성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김영호 위원장께서 배정위원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시면서 사실은 그날 이 협의체 구성을 완결 지을 수 있었는데, 정치권 주도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반드시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이 건이 유야무야되었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저는 야당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배정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대통령실도 여당도, 우리는 협의체와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었고 당시에 합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관님,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없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제가 교육부장관께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야당도, 우리는 모두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 엉뚱한 배정위원회 얘기를 거론하면서 그 합의가 청문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2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서지영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서지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소개하면서 김영호 위원장님의 질문이라고 했던 부분은 당시 조정훈 간사의 질문이었음을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주 동구남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국무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전력 송배전망 부족 문제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외평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 간단한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 송배전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수도권의 6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그게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도 결국은 전력 문제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발전설비를 송전설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불시에 생산이 중단되는, 전력 출력제어율이 높아지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도 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전력계통은 한전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하도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전의 재무 상태, 부채가 200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원도 부족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배전망의 관리 운영이야 예를 들어서 한전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재원을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목소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부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영화 논의로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전력망법에서는 거의 다 삭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인데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여하튼 전력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하는 건데, 여하튼 관리 운영의 문제와 투자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다음, 존경하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외평기금 20조를 부족한 세수결손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지요. 한 20조 되는데 그중에서 14조 4000억 원은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지요.

그런데 변경된 금액을 보면 당초 금액 대비 한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계정성이기 때문에 변동률이 20% 이상이 되면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를 얻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안도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3항에 보면 아시겠습니까만, 3항 4목이라고 그러나요? 4호 다목이군요.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은 20%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체 변경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처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말한 차입금이 뭐냐? 기재부에서는 이 차입금은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예정처는 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국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상환해야 된다, 그래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에 넘겨진 돈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내부거래로 움직이는 것을 차입금 상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자체기금의 채무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법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70조라는 게 그 취지를 보면 이게 국채를 상환하는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입금을 해석함에 있어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넘어가는 예수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에 대한 상당히 법적 시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빌린 국채를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는 국회가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을 분명히 하고 또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시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관리 주체의 효율적인 채무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해석의 문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입법론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해석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별 기금의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입법론적으로 맞는 건지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 70조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고 또 법의 취지를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부 내부의 회계나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금이나 예탁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기금을 통해서 조달한 국채를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20%의 한도를 넘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데 제 의견을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간의 거래, 정부 내 타 기금으로 차입금 하는 것도 이렇게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20%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명확하게 바꿔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제로베이스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명확히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안도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듭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티메프 관련된 이야기부터 일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재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지, 지금 누구한테 여쭙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총리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티메프 관련 대책들 발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저희 의원실에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대출 지원이라든지 티메프 관련 피해 기업들 대책 만드신 것 실제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정산 금액 총액이 1.3조 원이고 피해 업체 수가 한 4만 8000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장철민 위원** 일단 1조 6000억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장철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 진행되는 것은……

○**장철민 위원** 부총리님이 잘 모르시면 혹시 아시는 분……

중기부장관님이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중기부장관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7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했기 때문에……

○**장철민 위원** 그런데 중기부 관련된 것이 1조 6000억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2700억 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2700억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1000억이 조금……

○**장철민 위원** 그러면 사실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장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조 3000억 정도는 장관님 중에 어떤 분께 여쭙봐야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정부에서 낸 것은 5700억이었고요. 기업은행하고 신보 해 가지고 하는 게 3000억 원이 있었고 나머지 예산들은 지자체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긴급대응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자료 보고가 안 되길래 저희가 기업은행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확인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수준에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자체도 당연히, 굉장히 지자체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되게 어렵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삼십몇 % 수준만 사실은 집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신규 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지요. 피해

기업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대출 심사 조건 같은 것들을 오히려 들이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책만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컨트롤하는 중앙부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 티메프 관련 대책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관계부처들이 합동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장철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요청드리는데 겁니다. 이게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후에 정말 제대로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문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확실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이번에 8월 말까지 피해 기업들, 4만 8000개 정도의 피해 기업들에 대한 확인은 일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책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법원에서 지금 회생 절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4만 8000개의 기업 중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정말로 계속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하드랜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는지 좀 구체적인 모니터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중앙부처나 기업은행에서 돈을 얼마 지급했다 이런 수준의 집행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이 기업들 하나하나의 생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전반적인 집행 실태를 점검하시면서 우리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니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이것을 운영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가 티메프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위원장님도 계실 텐데……

공정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여기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우리가 자율 규제라는 규제 방식이 부처 내에 확립되어 있습니까? 법상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시장을 규율하는 방식에서 자율 규제라는 방식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것은 부처에 따라서 자율 규제 형식으로……

○장철민 위원 자율 규제라는 말을 자율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업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방임이고요. ‘기업 네가 알아서 그냥 기준 정해 가지고 해라’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그냥 방임하는 거고요. 자율 규제는 규제의 내용 같은 것들을 국회나 정부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게 자율 규제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공정위에서 사용하는 자율 규제나 정부 부처들에서, 일부 부처들에서 마구 사용하는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게 방임이더라고요. 이 티메프 관련된 사안의 근거가 됐었던 온라인 유통 관련된 자율 규제 이런 것들, 작년에 발표하신 내용 같은 것을 이렇게 제가 쪽 봤는데 사실 저희가 입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전에 학문적으로 논의되던 자율 규제랑도 완전히 켜가 다릅니다. 그냥 방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업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를 들면 티메프의 사전 정산금 관련해서 사업자 간에 정하도록 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장철민 위원 그렇지 않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사업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장철민 위원 그래서 이 티메프의 70일이라고 하는 게 판매자와 기업이, 티메프가 협의해 가지고 정한 거였나요? 사업자 간에 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정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티메프가 정한 거였지요? 이것은 방임이에요.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규제라고 하려면 그 기준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은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지켜지도록 뭔가 방금 공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부 부처가 모니터를 하든 어떤 책임들을 부과하든 하는 게 자율 규제인 거지요.

그냥 대기업이,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행위자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게 그게 규제입니까? 방임이지요. 정부 부처의 의무 해태고 시장질서를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지요. 그래서 티메프 사건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정산기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장철민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정산기한 관련해서는 그게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장과 사회가 굉장히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자율 규제 방식이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율 규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철학을 저는 사실은 꼭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의 지배적 어떤 행위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독단적으로 정하는 건 절대로 자율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대등하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정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켜질지에 대한 책임성까지 담보하는 그런 제도가 될 때 그게 규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것이 사업자하고 입점업체단체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부총리님들이나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립되지 않은 규제 방식, 사실은 저희는 완전하게 방임의 효과, 그래서 티메프는 완전히 국가책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책임의 영역까지 만들어 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앞으로 온라인 시장을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데 자율 규제 방식을 도입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총칙적인,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 저희 국회도 이런 종류의 규제 방식들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정부책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율 규제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이야기하시고 그게 실제적인 시장의 피해로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각론에서의 규제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총론적인 부분, 그런 어떤 입법 원칙에 대한, 규제 원칙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함께 토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하고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이 모든 생태계에 있어서 오프라인 규제는 잘되어 있는데 온라인 거래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보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량을 전력망, 송배전망이 따라가지 못해서 전력 수급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또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산자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에 대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보면 원전 3기를 더 건설해야 되고 또 태양광, 풍력 등을 지금의 다섯 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도 실제 이게 필요한 곳에 송배전되는 데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에 대해서 송배전망, 전력망 확충계획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건설이 될 수 있느냐, 송배전망을 실제 그렇게 계획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장관님도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계획기간 내에 송배전망이 제대로 확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반도체시설 등 첨단시설의 가동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블랙아웃도 예상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된 일정으로는 지금 차근차근히 가고는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계획기간 내에 갈 수 있다라는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송배전망 건설되는 속도나 이런 것 등을 볼 때, 민원 등을 볼 때 이게 가능하냐 또 앞으로 그 많은 여러 가지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송배전망 지중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가 됐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산업화 시대에는 SOC가 철도나 도로가 되었지만 이제 AI 시대, 첨단산업 시대에는 최고의 SOC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력망입니다.

○강승규 위원 전력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전력망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중화밖에 없고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공용지로서 최고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요 고속도로도 있고요. 또 요즘은 해저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상에 송배전망을 설치하는 데 따른 민원이라든가 시간 또 여러 가지 불균형을,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 등을 감안할 때는, 지금 우리 철도나 도로 등 상당수 SOC들이 대부분 끝났습니다.

도로 더 건설할 필요 없습니다. 철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동안 제기해 주신 철도망에 있는 그 라인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제기를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18대 의원 때 보면 저희가 그동안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만들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망을 민영화하고 경쟁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IT산업, 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KT를, 그 전부터 민영화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KT의 공기업 그런 통신사업을 독점시켜 놓았을 때 지금 우리 IT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확신 못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렵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력망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계통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저전력이나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발전시설, 지금 강원도의 삼척발전소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를 만들어 놓고도 가동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드 차원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사업이 지난 정부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는 달리 현금을 구직활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2019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이 있었고 또 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전 정부에서 하던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이 연평균 한 3000억 들어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매년 90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행 후 3년 동안의 어떤 실적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1유형의 경우 목표치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에 달성률이 57.2%에 불과했고요. 또 22년에는 6000억 이상, 23년에는 3000억 정도의 불용액도 나왔습니다. 또 이 사업을 성공한 이후에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또 지금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취업률을 비교를 해 봤더니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률이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꽤 상승을 했는데 국민취업제도는 64.7%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3배 이상 쓰고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금 살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취업 성공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 이런 부분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고용 유지율을 봐도 1년 이상 취업을 계속 이어 가는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취업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요즘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경제활동 또는 청년·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성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면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딱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도 더 들여다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 1877개에서 2024년에 3737개로 2배 정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강승규 위원** 그러다 보니 사회적기업진흥원, 제가 이것 18대 때 발의해서 만든 제도인데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2017년에는 353억이었는데 23년에 693억으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회적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하는 만큼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공시율을 보니까 2018년에 25.6%이던 것이 2021년 53%로 피크를 이룬 이후에 2023년에는 28.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자율공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경영공시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이런 경영공시를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마는 올해에는 43.9%, 자율경영공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정한, 더 검토를 해서 의무화하는, 경영공시 자체를 법적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승규 위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공시 등을 의무화하고 계속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시을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GTX-B가 2030년에 완공 예정인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GTX-B 노선 사업 확정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미……

○김병주 위원 사업기간이 22~2030년까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2.8km 노선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거장이 14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가 3월 7일 날, 올 3월 7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 공사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작을 못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재정구간이 용산에서 상봉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이미 지난해 말에 수직구 공사, 용지 보상 등의 시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마 인천대입구에서 용산까지 오는 민자구간인 것 같은데요, 착공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완료하고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어서 하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봉하고 마석 구간은 어떤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상봉-마석 구간은 현재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 분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협약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대입구에서 상봉까지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실 재원 조달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상봉에서 마석까지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왕숙신도시에 따라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GTX-B가 마석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숙신도시 건설할 때 아파트 건설을 지금 한 6개월 당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왕숙신도시 입주가 6개월 빨라지고 그런데 이 공사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선교통 후입주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가 대원칙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9호선 연장선도 2031년에 차질 없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9호선 연장선은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서 남양주선인데 결국 종착역은 진접2지구 가칭 풍양역이 종착역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이 공사가 강일동에서 진접2지구 풍양역까지 18.1km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2031년에 개통이 돼야 하는데 아직 여기는 착공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에 있었던 별내선처럼 이것도 경기도가 지금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저희한테 기본계획을 제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차질 없이 약속대로 31년에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왕숙지구도 그렇고 진접2지구도 그렇고 아파트가 6개월 조기 착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한 참 후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착역이 가칭 풍양역이잖아요. 진접2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앙지점에 종착역이 생기는 것 알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이 종착역도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4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호선은……

실제 진접2지구도 착공이 6개월 앞당겨져서 원래 계획은 내년 6월인데 올 12월에 아파트 착공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실제 2027년 12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진접2지구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4호선이 지나는 그 풍양역을 조기에 완성해서 4호선을 이용하게 하고, 9호선 연결은 좀 나중에 되더라도, 31년에 되더라도 하게 되면 진접2지구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당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위원님 지적 주신 것을 기화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진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풍양역 역사를 만드는데 그 앞에 보면 넓은 광장을 만들고 복합공간을 개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셨는데 2024년, 올 1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복합공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LH에 임무를 주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주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진접2지구하고 왕숙신도시 아파트들이 6개월 앞당겨지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6개월 앞당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지금 앞당겨지고 나머지는 앞당겨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교통 후입주가 큰 원칙인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을 조기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같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고 진접2지구가 되고 진건지구 또 새로운 지역이 되면 인구가 한 40만 명 유입이 돼서 당분간 이대로, 계획으로 가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교통지옥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가 당겨지는 것만큼 교통도 당겨질 수 있게 학교도 당겨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병주 위원 어저께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8호선이 별내선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도시 초입에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별내 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별내별가람역까지 갔어야 되는데 초기에 계획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편한데 그래서 별내별가람역까지 중간에 중앙역을 넣고 연장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 지역 별내면 청학리를 거쳐서 의정부까지 연결을 해야 사실은 서울·수도권의 이쪽 동북 축선 있잖아요, 그쪽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데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별내선 개통식에서도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타 한 번 떨어졌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정부 쪽으로 좀 더 연결하는 연결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상태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다시 한다 해도 예타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타 규정상. 어제 부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대로는 통과가 잘 안 되고요.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아예 이 기회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전향적으로. 또는 예타 기준에 그쪽은 예외를 좀 줘서, 왜냐하면 서울의 동북부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줘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5 대 5 비율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해서 이것은 꼭 돼야 되거든요. 실제 별내 지역에는 10만 인구고요 왕숙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거기는 한 20만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유입이 빨대처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수도권에서 진접·별내, 360도로 보면 서울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상수도원도 있고 또 군부대가 있어서 규제도 많이 받고 그린벨트가 또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수도권 내에서 예타 배점 조정 부분은 앞선 질의에서 목동 지역에 있는 목동선도 아마 건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관계 부처 입장에서 기재부와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부총리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엄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부자감세에다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미래를 포기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민주당 주장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제의 어떤 개선이고요. 그래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경제학자별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마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최근 민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올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24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23개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가뜰이나 오름세에 있는 물가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불안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파 정부에서 나라 곳간 채워 놓으면 좌파 정부에서 분배가 중요하 다면서 퍼주고 다시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 다시 또 긴축재정 하면서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사태가 늘 최근 역사를 봐도 반복이 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저희의 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는 건전재정 내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는 민생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는 부분은 다 확실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도 재정수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엄태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건축재정보다도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건전재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건전재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은요, 왜냐하면 건전재정을 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제언에 따르면, 이런 재정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세정책은 그것보다는 조금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어서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 따르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건전재정과 감세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박수민 위원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해를 돕는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 위원들도 공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25만 원 현금지원법을 보면서 야당은 참 교묘하게 적절히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서 포퓰리즘을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러다가 망한 나라, 우리는 여러 나라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도 총선 한 일주일 앞두고 25만 원 현금살포법을 야당 대표가 발설을 했어요. 가구당 100만 원씩 돌아간다, 어려운 가정에서는 거기에 현혹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선거 있을 때마다 이런 야당의 선심성 포퓰리즘 살포 심리가 또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선거 있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 국민들도 집단적으로 계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엄태영 위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청년정책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세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처를 신설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점은 청년들이 요새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쉬었다 이런 청년이 44만 3000명입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연령대가 30대까지 확장하면 무려 73만 명입니다. 그냥 쉬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쉬는, 부모한테 그냥 얹혀 사는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면서 1호 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제 법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각 부처에 있는 청년정책을 한군데로 몰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8일, 며칠 전에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면 노인복지법이 81년 제정되고 97년 이후 27년간 전면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해 주시고 법안 준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은 타 복지법하고 달리 기본계획 규정도 없고 이를 심의·논의하는 기구도 없기 때문에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태영 위원 27년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노인들 케어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사회에서 같이 동반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취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65세의 노인연령도 이제는 연차적으로 늘려서, 이제는 70까지 늘리는 것도 노인중앙회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정년 연장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의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권향엽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권향엽 위원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피해 구제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해, 그러니까 정산해야 될 금액이 1.3조 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와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공정위, 금융위, 중기부가 같이 해서 피해 업체 4만 8000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 피해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정부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부에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보·기보에서 하는 자금들 그다음에 지자체 자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개선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정부가 1차 대응 방안 발표한 것이 7월 29일이었습니다. 대출 승인은 그로부터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맞지요?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 6월·7월분 정산기일이 도래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름도 긴 시간인데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사실 저희는 보름 시간은, 사실 정책금융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바로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비공개·공개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부총리님, 당시 피해자들은 모든 상담창구가 마비된 상황에서 대출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 나올지, 나오기는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답변조차 못 듣고 받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계 부처 TF 발표 때마다 늘어나는 피해 규모와 지원 예산도 의문입니다. 7월 29일 1차 대응 방안 발표 당시 미정산 금액은 2134억 원이었는데 8월 21일 3차 대응 방안 발표 당시에는 818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23일 최종 집계된 미정산된 금액이 1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동성 공급 예산도 56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다시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마련한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자금을 보면 이번 사태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중소기업인 지원사업 예산을 통째로 올린 것입니다. 금융지원 1조 6000억 원 중 지자체 자금은 1조 원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지자체 교부금은 삭감하면서 티메프 사태 때는 지자체 썸짓돈까지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정작 중진공, 소진공 등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쓰고 남은 잔여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생색 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기부장관님, 본 위원은 판매업자들을 위한 윈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중진공 상담창구에서 신용보증 상담까지 해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긴급대응반을 범부처에서 만들었고요. 그 긴급대응반 사이에는 연계가 되어 있었고 한 곳의 창구로 왔을 때 다른 창구로 연계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면밀하게 챙겼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진공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신보에 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톱 창구를 개설하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금융위와 중기부에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 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1억 원 이상의 피해 기업 중 자금 신청 기업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 1억 이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넓혀서 상담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기부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동의합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처럼 금융지원 따로 채무조정 따로 법률지원 따로, 여러 기관에 창구가 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하루 종일 신호 대기음만 듣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티메프 사태 양상을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라든가 AK폴 등 추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사태는 금감원, 금융위, 중기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원상복구되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실 직속의 컨트롤타워나 윈스톱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께서 건의드리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현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공정위가 TF를 하고 있는데 윈스톱 창구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기부장관님, 지난 28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가 신청자 수, 오늘 자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80억 원 예산으로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당초 중기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당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9개 플랫폼에 대한 경영 건전성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재무구조와 유동성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스 크로를 하고 있는 건지, 정산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이커머스마다 다른 정산 주기입니다. 이번 선정사에 포함된 쿠팡의 경우 정산 주기가 무려 60일로 주 1회 정산, 구매 확정 후 1일 등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입니다.

티메프 사태의 주원인이기도 한 긴 정산 주기를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정부도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쿠팡 입점업체 중 중소상공인들은 현행 정산 주기를 적용받아야 할 텐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협의 중인 사항이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저희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티메프처럼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디지털 전환 시대 중소상공인의 이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진출은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과기부장관님, 현재 국회에 정산 주기, 납품 계약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권향엽 위원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위원님.

○권향엽 위원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이 과제를 120대 국정과제 중 1호로 지정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 100만 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군을 김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경제 분야 질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깐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의 마음의 방향성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론 측면으로 들어가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은 또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님들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줬지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AI 기술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우리는 대책은 있는가. 저 지금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아직 없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술개발 측면에서 과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바퀴가 발견이 되었을 때 마차로 진화가 됐고 마차가 나오면서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때 인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차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자동차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가 된 거지요. 즉 시간의 속도 싸움이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들어 가지고 IBM으로 대표되는 대형 컴퓨터가 나왔을 때 큰 틀의 AI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컴퓨터 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스에서 윈도우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려운 도스 명령어가 아닌 그때서부터 쉬운 클릭 한 번으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편의성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TSMC에 대적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또 전 세계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이나 메타 이런 AI 3대 대기업, 우리나라에 그런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업이 있나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샘 알트만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이러한 사람에 대응할 수 있는 AI 관련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앞으로 이제 AI는 아마 편의성이 좀 더 추가되고 아주 크게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AI를 가진 강한 대국과 그렇지 못한 속국으로 재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 이런 것이 있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지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수출로써 우리 경제 상황을 상당히 버티고 있는데 그 수출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자동차가 큰 축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 두 업종 중에 한 업종만 타격을 입어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가장 큰 산이 지금 기재부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가져왔던 그 개념을 탈피를 해야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니고 정부 전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에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그다음에 그런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직접적인 보조금들은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그거 2년 전 답변하고 똑같아요. 미국하고 독일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텔과 폭스바겐 부총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거의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일한 상황 인식 때문에 그냥 공룡이 돼 가지고 굶어 죽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장관님의 답변은 2년 전 법안소위에서

답변을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이 아니라 기재부의 답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2년 전 이슈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업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과 같이 회의를,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해서 만든 지원 방안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산자위 간사 해서 알아요. 긴밀히 협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막혀 있으니까 우선 구멍이라도 뚫어 놓자, 그다음에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구멍은 뚫어 났습니다.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래도요. 이제 2년 동안 바뀌었으면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있게 기재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저는 기재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예.

○**김성원 위원**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4대 개혁 과제 중에 노동개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노동개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미 지난 2년 동안 수행해 왔던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치만으로는 노동 현장의 진정한 개혁이 안 되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따뜻한 노동 현장, 법치라는 엄격한 잣대와 또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정부의 손길, 이 2개가 합쳐질 때 노동개혁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꼭 노동개혁 완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하나는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의 연장 시간에 대한 부분도 할증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야간을 해도 못 받습니다. 휴일 휴가가 없습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과 또 4.5일을 주장하는 부분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더 벌리는 쪽으로 자꾸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면서 지금 4.5일 하고 싶은 그런 가능한 데는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연장수당도 못 받고 휴일 휴가도 없고 연차 휴가도 없는 이런 분들도 함께 걱정하면서 노사정이 삼위일체로 근본 이익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출석 위원(48인)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향엽	김병주	김성원	김승수	김영진	김영환	김용태
김태선	문금주	박수민	박수현	박 정	박지혜	서범수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신영대	안도걸	엄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종오	윤준병	이용선	임미애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차규근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출장 위원(1인)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현종
입법심의관 이형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안경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2차관 김윤상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차관 김선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환경부

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법제처
처장 이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세청
청장 강민수
관세청
청장 고광효
조달청
청장 임기근
통계청
청장 이형일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 조지호
소방청
청장 허석곤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산림청
청장 임상섭
차장 이미라
특허청
청장 김완기
차장 김시형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기상청

청장 장동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차장 오상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태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이상 2건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